



ICT 접목을 통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The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등 공제보험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저축급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사업 안내]

- ❖ 장기저축급여
-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 ❖ 복지시설 화재공제
- ❖ 재산종합공제
-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재가)
-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사회서비스 바우처)
- ❖ 요양시설배상책임공제
- ❖ 여행배상책임공제
- ❖ 신원(재정)보장공제
- ❖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 ❖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
- ❖ 회원대여 (담보대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잔여백신 당일예약 안내



✓ 잔여백신 조회 및 예약

1 네이버 혹은 카카오 앱을 통해 잔여백신 조회

NAVER

네이버앱, 네이버지도앱,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네이버에 접속하여, “잔여백신” 검색

kakao

카카오톡의 하단 샷(#) 탭에서 “잔여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맵 앱에서 “잔여백신” 검색

2 잔여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선택 후 ‘예약’을 누르면 당일예약 신청 완료

*예약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을 실시하며, 이미 네이버 또는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본인인증 생략 가능

✓ 알림 기능을 통한 당일예약신청



특정 위탁의료기관을 사전에 최대 5개까지 등록 ➔ 잔여백신이 발생된 경우 알림을 받아 당일 예약

1 잔여백신 조회 화면에서, 접종기관 선택 후 ‘알림 신청’

2 접종기관에서 잔여백신 발생 시 네이버 알림 및 카카오톡 지갑 채널에서 알림 제공

3 해당 알림 내의 ‘당일예약’을 누르면 당일예약 신청 완료

✓ 잔여백신 당일예약이 안 되는 경우

1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사람,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접종을 권하지 않는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은 잔여백신 당일예약 불가

2 잔여백신 당일 예약은 예약신청 순서대로 완료되며, 당일예약이 잔여백신량만큼 완료된 경우 해당 접종기관의 당일예약은 불가

잔여백신을 당일예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일 접종기관 운영시간 내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아 주세요. 당일 접종기관 방문이 곤란하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약 취소를 요청해 주세요. 예약 취소 없이 접종기관에 방문하지 않는 대상자는 앞으로 당일예약이 불가능합니다.



04

커버스토리 Cover Story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양화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사회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ICT 자원을 활용해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다.

- 기고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04
- ICT 접목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색한다 10



10

정책&이슈

Policy&Issue

-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 수용도 높아졌다 18
-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방안은? 20
-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생각 증가...2030세대 정신건강 악화 22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가족법 제정하라” 24
- 기고 코로나19 팬데믹과 아동학대 26
- 통계로 보는 복지 2021 청소년 통계는? 30

현장

Field

- “ESG 경영, 조직 체질 개선 우선돼야” 32
- 사회복지협의회, 새로운 역할 모색한다 34
- 기고 장기요양제도 시행 13년...요양보호사 처우 현주소는? 36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을 가다 호재 40
- 나는 ‘사회복지사’다 42

42



인물

People

- 최종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46
- 박미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50

세계

World

- 일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54
- 네덜란드 푸드뱅크 운영 현황 58
- 독일 어린이집 보육 지원 정책 62

문화

Culture

- 인문학 산책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늪음 66
- 방구석 영화여행 썸이 시작되는 곳, 강릉 70
- 뉴스, 신간 74

70



발행일
2021년 6월 1일

발행인
서상목

편집인
김홍중

편집장
전우일

취재
곽대경 이성우 한유미

편집자문위원장
황진수

편집자문위원
김현훈 변용찬 손수호 오단이 이길형 임은희

기사제보
02-2077-3999

구독신청·광고문의
02-2077-3931

발행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우 04195)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www.bokjitimes.com

등록번호
마포 라00204

창간
2008년 8월 1일

디자인·인쇄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값 6,000원

1년 정기 구독료
72,0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와 복사를 금합니다. 이 인쇄물의 본문 오른쪽 위부분에는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각장애인용 리더기를 이용하여 본문 내용을 음성출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정책과 사회서비스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ICT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부회장(한국지부장)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사회복지서비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복지 현장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선택이 아닌 필수 업무가 됨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원격 회의와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생활시설의 비대면 면회도 일상이 되었다. 인터넷 환경, 하드웨어 및 전문 인력 미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제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바야흐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시작된 것이다. 사회의 거대담론이 된 디지털 전환은 사회복지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봄 구글 답마인드사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한국의 프로 기사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국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다. 정부는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이 확산된 직후 2017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21개 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2년까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능화 기술 R&D에 총 2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는 R&D 체계를 혁신할 것을 제시했다. 이 계획의 핵심 내용에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 구현, 자율제어 기반 지능형 스마트홈 확산, 진료정보 전자교류 전국 확대,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복지와 관련해서는 간병·간호 지원 로봇 도입, 치매노인 생활보조 혁신 등의 내용이 들어갔을 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까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보다는 정보 불평등 및 디지털 격차 해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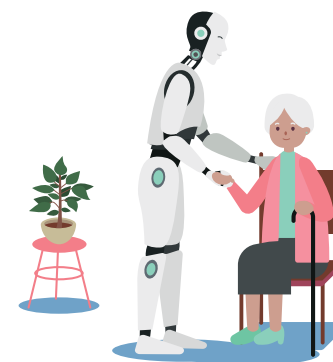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의 변화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로 I-KOREA 4.0 계획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개편됐다. 한국판 뉴딜 계획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2개 영역을 포함한다.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디지털 뉴딜은 5G 망을 기반으로 전 산업의 데이터를 수집·가공·결합하고, AI 분석을 통해 의료, 교육, 제도 등 연관 분야에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IT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으므로 데이터 댐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 모든 부문의 디지털 전환 계획을 담은 이 보고서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보고서(관계부처합동, 2020)에는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관련 ‘취약계층의 불편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서비스 개발’ 정책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며,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은 독거노인·장애인 등의 맥내 또는 집단거주시설 대상 맞춤형 디지털 돌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IoT·AI 기기 보급 및 서비스 제공 과제만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대부분 취약계층 집단을 대상으로 기획되어 있는 실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 삶을 바꾸는 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의 2021년도 사업에는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었는데, 건강취약계층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추진 및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돌봄로봇 4종 개발 사업 외에는 대부분 보건의료 관련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디지털 뉴딜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DNA(Data, Network, Artificial Intelligence)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기술과 관련성이 많은 영역은 장애인복지¹와 노인복지²이다. 복지급여로 제공되는 장애인 보조기구나 노인 복지용구는 대부분 하이테크 제품들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한편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는 인공지능 스피커, 동작감시 센서, 반려 로봇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접목되기 시작했다.

1 장애인복지법 제6장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에서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 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장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가운데 바. 기타재가급여(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18개 품목)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건복지부는 2009년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ICT 기반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했다.

국내 사회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기반 서비스 모델을 살펴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포털 '복지로'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ICT 기반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을 활용하거나 스마트도시 사업과 연계해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로봇과 안전 확인 서비스를 포함한 응급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보건소에서도 취약 집단 중심으로 혈압이나 체온을 측정하는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은 사회공헌사업 차원에서 지역사회 취약 노인들에게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하거나 ICT 복합공간 등을 조성해 고령자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전체 디지털 기

반 서비스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과제

뉴노멀 시대 디지털 뉴딜 정책의 확산 속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돌봄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DNA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안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디자인을 기획해야 비로소 디지털 전환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격차 문제는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달성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제이다. 대한민국은 초고속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이고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공지능기술이 가능하게 해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반복적인 업무를 기술에게 맡기고 휴먼서비스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표준화 및 품질 제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취약하고 사용자들의 디지털 격차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최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 관련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매년 산출하는 '디지털 정보화 수준'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의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고령층의 경우 64.3으로 가장 낮고, 장애인 75.2, 저소득층 87.8, 농어민 70.6 등 순으로 밝혀졌다³. 사회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연대하여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용성과 사용성이 부족한 기술 개발의 현실 속에서 복지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디지털 역량 교육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이다.^③



³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SAZJUWU>).



ICT 접목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색한다

SDGs 2차 국제포럼 개최...
국가별 현황 및 사례 공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양화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ICT 자원을 활용해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를 발굴해 보다 많은 사회복지현장과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6월 30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는 'ICT 접목을 통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국제포럼이 열린다.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SDGs 국제포럼은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사회 이슈를 연결해 현안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획됐으며, 올해 총 4회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1부 '포용적 복지를 위한 ICT 역할과 이슈', 2부 'ICT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국가별 사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해외 연사의 발표 녹화 영상을 받아 한글 및 영문 자막과정을 거쳐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채널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해외 연사들의 발표 내용을 번역해 요약하여 신는다.



ICT를 활용한 사회사업의 국제적 현황

세르게이 젤레네브 국제사회복지협의회 UN대표부

디지털화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전에는 다양한 이유로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를 제공한다.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은 사회적 포용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우리는 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발병으로 모든 세대가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보건서비스를 비롯한 원격서비스 제공, 원격 학습, 원격 회의 등이 일반화됐고,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일하는 장소와 시간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디지털화는 청년층뿐 아니라 모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컴퓨터 기술이 없고 인터넷에 접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연령, 소득, 교육 수준이 기술 습득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한다. OECD 연구에 따르면 55~65세 근로자의 3분의 1은 컴퓨터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사회적 포용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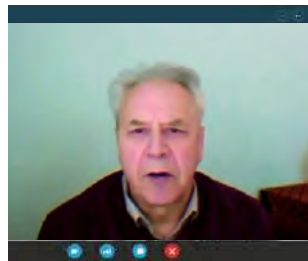
디지털 포용과 세대 간 격차는 새로운 도전 과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은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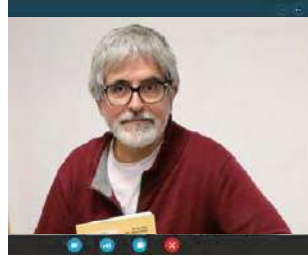
집중해야 한다.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 상대적인 혜택을 통해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격차는 사회적 포용을 막는 장애물이므로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의 기회와 혜택의 측면에서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비전이 필요하다. 국가, 민간 분야, 시민사회가 함께 기술의 접근과 활용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디지털 포용을 위해 일관된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디지털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하고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의 제도적인 변화를 위한 조화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시민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세르게이 젤레네브 국제사회복지협의회 UN대표부



사이메 마르쿠엘로 스페인 자르고자대학교 교수



안드리아 아길레라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교수

자 한다. 데이터 사용자인 우리는 상품화되고 있다. 디지털 습관과 데이터 전송 때문에 감시 자본주의의 대상이자 데이터 자본주의 물질로 전락했다. 미국의 컴퓨터과학자인 재런 러니어는 페이스북과 같은 무료 기술에는 숨겨진 높은 비용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란 소비자의 삶이다. 우리의 과잉 행동을 데이터 자본주의의 먹이로 만드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술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기술 효과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개인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거대한 구조적 비즈니스가 형성됐다. 데이터, 개인 데이터, 개인 선호도는 개인의 결정을 예측하고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여기에서 권력 관계, 의식 수준 간 갈등 관계가 형성된다.

이처럼 데이터와 전력 소비가 우리 선택을 예측하는 전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의 구조적 역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 속에서 디지털 자유권과 디지털 소유에 관해 생각해 보고 데이터와 감시의 세계적 시장 속에서 단순한 소모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위한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와 ICT는 인간의 디지털 권리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으며, 포용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디지털 사회 속 포용을 위한 사회복지를 달성하려면 감시와 데이터 자본주의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 사회복지도 데이터 자본주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디지털 사회의 사회복지, 코로나19와 데이터 자본주의

사이메 마르쿠엘로 스페인 자르고자대학교 교수

디지털화 과정은 사용자와 이들의 요구 사이의 상호 관계를 변화시키고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사들도 변화시킨다. 또한 배척의 과정이 재정의되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진단, 개입, 평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요구한다.

디지털 권리는 인권의 새로운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감시와 데이터 자본주의 문제를 지적하고

디지털 정신건강 개입의 형평성과 다양성 도모

안드리아 아길레라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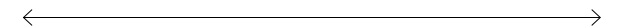
정신건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개입 방식은 다양한데 △전형적인 대면 개입 △일부 기술을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대면 치료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자체 개입 △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화된 개입, 즉 기술의 개입이 있다.

기술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인간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 인간적인 지원을 포함했을 때 책임, 정당성, 동기를 높일 수 있고 결과와 도구의 사용을 개선할 수 있다.

디지털 건강 적용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이러한 도구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영어로 제공되고 있어 세계적인 영향력에 제한이 있으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한계가 있다. 게다가 비용이나 서비스 접근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건강과 디지털 격차의 접점을 살펴보면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 인종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좋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발 과정에서 소외계층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점차 고착화될 것이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 인종 간 건강 격차를 해결하는 것에도 사람이 먼저여야 하고, 기술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보건 분야는 이미 기술에 매료되어 있다. 기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기술이 결합해야 하고 인간의 경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의 기회와 혜택의 측면에서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비전이 필요하다. 국가, 민간 분야, 시민사회가 함께 기술의 접근과 활용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디지털 포용을 위해 일관된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디지털 사회사업 : 디지털 미디어를 현장과 연구에 통합할 수 있는 전략

호아킨 카스틸로 메사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교수

디지털 변화는 교류 방식과 특정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와 앱을 사용해 일상 속에서 매일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매일 디지털 세계에서 사람 및 사물과 소통한다.

이러한 디지털 세계 속에서 문제시되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의 양극화와 극단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문제 행동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알고리즘, 인공지능, 로봇 학습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는 정형화되고 있다. 디지털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은 절제와 전문성을 갖도록 요구된다.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디지털화를 가속화시켰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디지털화로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사회복지 기관은 사회복지사들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되 기준이 있어야 한다. 물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전통적인 대면 활동을 대체할 수는 없다. 다만 디지털 미디어의 잠재력을 활용해 대면 활동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며 이행과 연구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발견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의 디지털 변화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모델로는 △디지털 적응 △디지털 전환 △디지털로 인한 파괴가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서비스와 절



호아킨 카스틸로 메사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교수



탄용정 싱가포르대학교 교수

차에 있어 대대적인 디지털화가 요구된다. 데이터 디지털화를 통해 현재의 서비스 절차와 도구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과거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던 데이터에 외부 단계를 자동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업데이트하며, 새로운 방식을 통합해 반응 시간을 개선하고 시간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디지털 파괴는 '영역의 변환'과 같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서비스 절차나 제품을 제안해 기존의 것을 완전히 바꾸는 방식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사회복지의 자체적인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디지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기술을 인간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또한 시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고 포용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접근, 연결, 사용, 참여에 있어서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한다.

소셜인클루전과 사회복지를 위한 ICT의 역할

탄용정 싱가포르대학교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싱가포르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봉쇄가 실시됐다. 사람들은 출근, 등교를 할 수 없었고 가족도 만날 수 없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ICT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원격으로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됐다. 단순히 단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상대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강의실에 있을 때보다 학생들의 반응을 더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ICT는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사회 서비스를 통해 ICT를 사용하는 방법이 혁신적으로 바뀐 것이다. 현재 온라인 사회복지 훈련 플랫폼인

'사회복지 국제 연구소' 의장을 맡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온라인 사회복지 교육과 훈련을 위한 전략으로 '접근성'과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즉,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 지식과 개입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재난 관리, 위기 개입에 관한 강의를 중국어와 그 밖의 다양한 언어로 제공했으며 현재는 베트남, 러시아, 그 외의 국제 언어로 확장하고 있다.

재난에는 국경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개입은 경계가 없어야 하며 효율적이어야 한다. 물론 좀 더 전문화된 훈련을 원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지식은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과의 공유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해 논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이다. 기본적인 지식과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ICT와 디지털 사회사업 : 스페인의 사례

안토니오 로페스 펠라에스 스페인 원격국립대학교 교수

2018년 12월, 팬데믹 발생 전 스페인 상업부는 시민의 디지털 권한을 수립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안토니오 로페스 펠라에스 스페인 원격국립대학교 교수

2015~2019년까지 스페인에서는 디지털 사회사업, 디지털 사회복지, 사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관련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시기 디지털 사회 서비스 연구결과는 사회 서비스 이용자의 웰빙과 디지털 기술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줬다.

스페인 사회복지위원회는 봉쇄 기간 동안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전문가들에게 심리적인 지원을 위한 무료 핫라인 전화를 운영했다. 사회복지사들은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막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많은 행정부가 ICT를 이용해 사회서비스를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ICT의 폭넓은 사용은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용자와 조직의 관리 방식, 사회복지사의 작업 방식에서 새로운 요구가 생겨나고 있다. ICT를 활용해 새로운 지식과 사회적 개입 방법에 접근, 적응, 개발하는 능력은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 환경은 사회적 개입의 분석 대상이며, 기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디지털 개입을 통해 절차를 개선하고 디지털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와 양극화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이 같은 물리적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가시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ICT와 사회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자원 프로그램과 관련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와 사용자의 디지털 역량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봉쇄는 디지털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행을 앞당겼다. 디지털 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전문적인 사회복지 관행의 일부가 되었다. ICT와 디지털화는 지속될 것이므로 학생, 전문가, 사회복지사의 역량과 기술을 개선해야 한다. 디지털 포용을 이루지 못하면 포용적인 사회복지사는 달성할 수 없다.

대만의 ICT 활용 사회서비스 사례

린웬샹 대만국립대학교 가족연구센터 교수

대만 국가개발위원회는 오랫동안 디지털 포용을 위해 노력했다. 디지털 격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매년 ICT 기술을 사용하는 인구 비율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한다. 또 지역 정부와 협력해 성인 및 청소년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이주민 등을 돕는다. 그 외에 온라인 시민활동이나 행동을 조사하고 스마트 국가와 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지역별 디지털화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팬데믹이 지속되는 동안 시민들은 공공 정보와 학교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다. 학교는 대부분 문을 닫았고, 청소년들은 집에서 홈스쿨링을 해야 했다. 이에 청소년들의 생활, 사회적 관계, 학습을 위해 ICT 기술 활용을 도와 자기주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ICT 활용 사례로는 마스크 공급 관련 '챗봇'을 소개한다. 팬데믹 초기 대만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마스크가 부족했다.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를 제한했는데, 챗봇은 시민들이 참여해 실시간으로 마스크 재고가 있는 약국을 알려줬다. 위치 기반의 서비

스로 ICT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이다. 챗봇은 공공 서비스였지만 시민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고 대중을 위해 효과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만대학교 연구소에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개입의 일환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사회성 증대 등 긍정적인 능력을 키워 건전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처음에는 흡연 예방에 집중해 아이들이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해로운 물질 사용을 권하는 친구들의 요구를 거부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이후 프로그램을 수정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자료를 접하게 함으로써 팬데믹 시기 스트레스와 어려운 문제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와 교수들이 스트레스 해결과 상실감, 저항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를 실증 증거를 기반으로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CT를 활용한 사회서비스의 전망

아민 무니르 모로코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모로코의 ICT 활용 사례로는 '연합 사회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디지털 등록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 만들어진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의 사회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데이터는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회적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년 전에 시작됐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진척이 더뎠으나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사회·경제 및 환경위원회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에 공헌하는 것인데,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스템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수집함으로써

현재 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지속적인 연구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과거 사회적 관계는 관습적인 주체에 의해 구성돼 왔다. 그 중심에는 가족이 있었고 지역사회, 도시, 국가로 확대됐다. 우리는 모두 이 모델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현대의 모델은 완전히 다르다. 세계가 디지털 접근을 통해서 개방되고 있다. 경로는 아무도 모르고, 경로가 하나도 아니다. 가족은 경로가 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디지털 환경 밖에서 만난 적이 없는 친구를 가질 수도 있다. 여기서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 경우를 많이 봤다. 의사결정자들이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 소통으로는 부족하며, 그 이상이 필요하다.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40세 이상의 교육은 어렵다. 가까운 미래에 젊은 세대가 단순히 접근성 개선을 넘어 포용적인 디지털 환경을 만들길 바란다.

SUAS, 소셜인클루전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ICT 기술의 활용 사례

마르시아 로페즈 브라질 런던리나대학교 교수

브라질의 공공정책을 위한 법적 기틀은 1988년 연방 헌법으로 제정됐다. 헌법은 정부를 비롯해 국가의 책임에 대한 지침을 정의하고 수립한다. 이 내용은 26주 연방 구역, 5570개 지방정부에 적용되며 공공서비스를



린웬샹 대만국립대학교 가족연구센터 교수



아민 무니르 모로코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마르시아 로페즈 브라질 런던리나대학교 교수

구성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공공정책의 지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정책과 행정의 분권, 공동체의 참여다.

브라질 헌법에는 사회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 지원은 공공국가 정책, 시민의 권리 및 국가의 의무로서 이를 요구하는 모든 브라질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2004년을 기준으로 국가의 사회 지원 정책은 SUAS라고 불리는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시스템으로 조직됐다. 사회적 포용을 위한 권리인 SUAS는 모든 브라질 주 및 지방정부에서 분권되고 조율되며 규제된다. 이때 정부와 비정부 네트워크는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 개발 및 기아예방부는 평가와 정보 관리를 위한 국가의 사무국을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SUAS와 브라질 통신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SUAS 시스템을 조직하고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매월 지급되는 수익 급여인 '불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은 1400만 가정과 500만명의 노년층 및 장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영구적인 혜택으로 출산과 사망을 지원하고, 취약 계층에는 일시적으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욕구에 따라 사회적 지원이 제공된다. 9000개의 사회적 지원, 예방 및 지침을 위한 기준 센터와 3000개의 폭력 피해자, 고령층, 농촌 및 전통적인 지역 사회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화된 사회 지원 센터가 있다. 사회 지원은 기본 및 특별 사회 보호, 권한의 보호 및 접근, SUAS의 정보 및 데이터 감시 등 세 가지 기능을 한다.㉞

번역 배리타스 정리 권대경 기자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 수용도 높아졌다

20대 절반은 비혼·비혼동거·무자녀에 동의... 1인 가구 증가세 뚜렷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개인의 가치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5월 28일 전국 1만99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이후 5년 만에 진행된 조사 결과를 통해 가구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형성 및 변화, 가족관계, 일과 돌봄, 가족 여가 및 참여, 가족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가족의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2015년에 비해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1인 가구는 2015년 21.3%에서 2020년 30.4%로 나타났고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2020년 31.7%로 2015년 44.2%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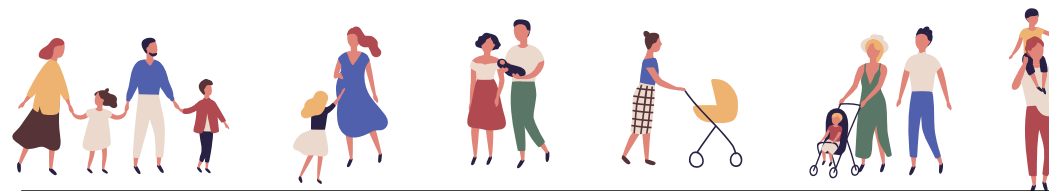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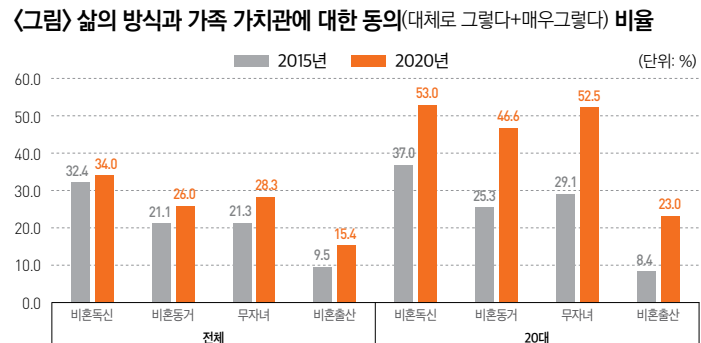
가족의 다양한 생활 방식에 대한 수용도는 20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비혼 독신, 비혼 동거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3%, 46.6%로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자녀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52.5%에 달해 향후 가족 형태 및 생애 주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혼식을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 장례식

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는 10명 중 6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70세 이상도 당사자 중심 결혼에 43.8%, 가족 중심 장례에 48.8%가 동의하고 있어 전통적 개념의 가족에 기반한 가족 의례에 대한 인식이 직계가족이나 당사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비혼 동거 사유 1위는 '경제적 이유'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2.8%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비혼 동거 사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31.0%,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18.9%,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18.6% 순이었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 의사 소통 및 전반적인 만족도는 57%로 2015년 51.2% 대비 5.8%p 높아졌으며,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연령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부의 가사 분담은 '시장 보기·식사 준비·청소 등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교육'을 아내가 하는 비율이 각각 70.5%와 57.9%로 높게 나타났지만, 29세 이하의 부부가 똑같이 수행하는 비율이 '가사 노동' 56.4%, '자녀 양육 및 교육'은 49.2%로 높아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의 82.3%가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린이집 이용은 61.0%, 유치원은 35.6%였으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 돌봄자는 아이 어머니가 87.4%, 조부모가 9.1%라고 답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 42.1%, 학원 37.7% 순으로, 2015년 학원 60.7%, 집 19.0%과 비교해 집에서 지내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은 영유아, 초등학교 모두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가 오후 4~6시라고 답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7~9시의 돌봄 서비스 수요가 높아, 해당 시간대의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61.1%, 50대 이상 고령층

전체 가구의 4.8%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 29.7%, '신체적 고단함' 26.6%, '정신적 스트레스' 26.2% 순으로 조사돼 주 돌봄자의 실질적



돌봄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가족 지원 서비스로는 '노인 돌봄 지원' 23.3%, '가족 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 14.3%,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방법 교육·상담 지원' 9.9% 순이었으며 연령대별로 20~30대는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 40대는 가족 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 50대 이상은 노인 돌봄 지원 수요가 높았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70.7%가 '한부모 가족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외에 '미혼부·모 가족 지원' 61.3%, '1인 가구 지원' 49.1%, '법률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35.7% 순으로 답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정책 필요성 동의 정도가 높았다.

한편, 1인 가구 특성으로는 여성이 53%로 남성의 47%보다 많고, 연령별로 70세 이상 26.7%, 60대 19.0%, 50대 15.4%로 5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1인 가구의 61.1%를 차지했다. 1인 가구의 혼인상태는 미혼 40.2%, 사별 30.1%, 이혼 또는 별거 22.3%, 유배우 7.4%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이 50.1%로 가장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가족 형태별 생애 주기를 반영한 지역 기반의 가족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㉔

글 박대경 기자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방안은?

유의미한 공적서비스 확대하고 당사자 참여 보장해야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과 탈시설을 위해서는 개인별 욕구에 따른 탈시설 지원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5월 6일 국회에서는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네 번째 순서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이날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탈 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개인별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 △조기 집중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 △유의미한 공적서비스 확대 △탈시설 장애인의 참여 보장 △기존 유사 지원 체계와의 통합성 고려 및 차별성 마련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시설 퇴소 전부터 정착에 이르는 특정한 기간 내에 비용 부담과 관계없이 집중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대상자 개인 특성, 환경 등을 고려해 지역 탈시설지원센터 등에서 공적서

비스를 직접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유의미한 복지서비스 목록을 발굴하고 이중 공적으로 추진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형태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 차원에서 연계됐던 복지서비스 또한 사회서비스 형태로 추진 가능한 것과 공적 영역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해 이를 공적 서비스로 개발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신청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이행과 평가 등 서비스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장애인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형 등 기존 유사 지원 체계와의 통합성·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개인별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탈시설정착금, 초기 소득지원으로 턱없이 부족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탈시설·최중증장애인의 소득·노동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이사장은 탈시설 장애인 소득지원 방안으로 △전체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탈시설정착지원금 강화 △노동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장애인 소득보장은 장애연금과 장



'탈시설화' 정책의 장기적 추진 과정에서 '탈가족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즉, 시설 보호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그 대상을 전환해야 한다.

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낮은 수준이고 장애연금의 장애 기준과 장애등급 판정 기준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장애인연금의 중증장애인 대상 범위를 축소된 기준으로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탈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시설정착금은 시도별 편차가 크고 현실적으로 초기 소득지원과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탈시설정착금 강화를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과제로 '노동을 통한 소득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최중증장애인, 특히 탈시설 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정책 역시 능력과 경쟁체계 속에서 최중증장애인인 탈시설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장은 "서울시는 현재 권리중심 공공일 자리에 탈시설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을 확대해 탈시설 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탈가족화' 고려해야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계획



수립 시 신속 자립이 가능한 경우를 위해 '패스트 트랙'도 고려해야 한다"며 "완전한 탈시설 지원 체계를 하나의 준거 틀로 사용하되 당사자의 선호와 의지에 바탕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또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자립정착금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자립수당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탈시설화' 정책의 장기적 추진 과정에서 '탈가족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시설 보호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그 대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부장은 "공공의 역할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민간의 역할은 지역사회 이웃을 연결해 시민으로서 친숙한 관계 속에서 지지망을 맺고 소속감을 형성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많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 협력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돼 개별적인 서비스를 받으며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생각 증가... 2030세대 정신건강 악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은 가족이 62.6%, 없다는 응답도 9.6%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2021년 1분기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 우울 확산 등 국민 정신건강 악화에 대응하여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실태조사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수행했으며,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110명을 대상으로 4월 초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내용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낙인, 일상생활 방해 정도,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이 담겼다.

우울, 자살생각 증가 등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 악화
우울 평균점수는 총점 21점에 5.7점으로,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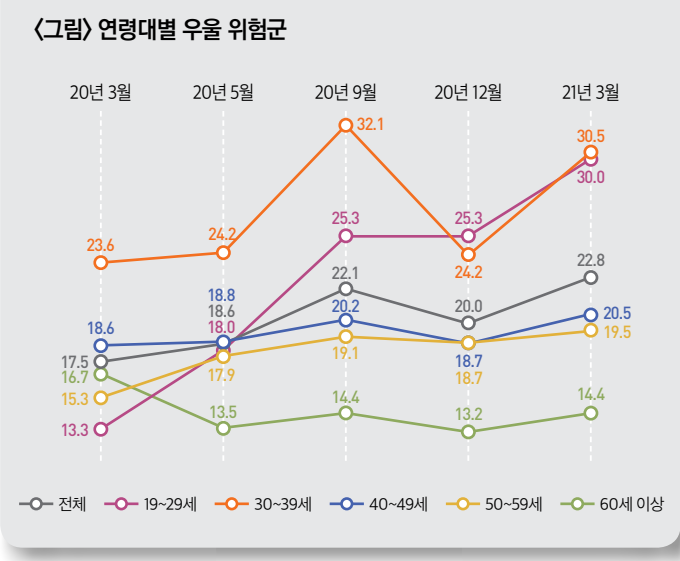
년 실시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인 2.3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였다.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 비율도 22.8%로, 지난해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3.8%에 비해서는 약 6배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의 우울 평균 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2020년 첫 번째 조사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조사 초기에는 가장 낮았으나, 급격하게 증가해 최근 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30세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 30.5%로, 60대 14.4%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우울 점수와 우울 위험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울 점수는 20대 여성이 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울 위험군 비율은 30대 여성이 31.6%로 가장 높았다.

자살생각 비율은 16.3%로 2018년 4.7%에 비



해 약 3.5배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9.7%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대별 결과에서도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 각각 22.5%, 21.9%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12.5%, 60대는 10.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자살생각은 남성이 17.4%로 여성 15.1%보다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동일하게 25.0%로 전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울, 자살생각 증가 등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조사 결과 평균 3점 기준에 1.7점으로, 작년 하반기 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불안에 대한 결과 또한 총점 21점에 4.6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리적지지 제공자,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성 증가
심리적지지 제공자에 관한 조사 결과, 가족이

62.6%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직장동료가 21.3%,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9.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가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4.0%, 57.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특히 20대는 친구 및 직장동료로 답한 경우가 36.2%로 다른 연령대의 15.8~21.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30대가 13.1%, 20대가 12.1% 순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비율이 높았던 2030세대에서 또 높은 비율의 답변이 나왔다는 점에서 심리적지지 제공자 유무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필요서비스에 관한 조사 결과, 감염병 관련 정보, 개인 위생물품, 경제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과치료,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마음건강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2030세대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심리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므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글 한유미 기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가족법 제정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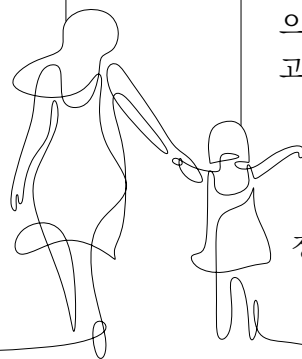
제3회 한부모가족의 날...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촉구

매년 5월 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이다.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일을 5월 10일로 정한 것은 '입양의 날'이 5월 11일인 것을 감안해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는 한국한부모연합,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명칭 변경하고 협소한 가족 정의 삭제해야

이날 한부모연합 등은 회견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은 여전히 ‘정상가족’에 속하지 못하는 잔여 범주로 남아있다”며 그 이유로 ‘건강가정기본법’을 언급했다.



이어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이외의 가족을 가정 기능이 저해된 가족으로 보고 있다”며 “법률혼,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 간주하며 지난 17년간 우리 사회의 가족을 규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사수하는 동안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 불리는 수많은 가족이 사회적 보호망 밖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건강한 가정’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는 이상 한부모가족은 늘 타인의 배려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취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부모가족을 ‘건강가정’에 위치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다. 한부모가족은 그저 이 사회의 수많은 ‘가족들’ 중 하나이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부모연합 등은 “다양한 형태로 현실에 존재하는 가족을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으로 나누는 건강가정기본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협소한 가족 정의를 삭제하길 원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각 개인이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가족이 한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제3회 한부모가족의 날인 5월 10일 국회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족 다양성 포용 위해 패러다임 전환 시급

한편, 여성가족부는 4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을 지향하고 모든 가족을 지원하며, 개인을 존중해 평등한 가족 관계를 구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부모연합은 “현재 한국 사회에 등장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현실로 인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결정은 새로운 가족담론의 시작으로 보아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청소년미혼부·모 등으로 ‘돌봄 취약계층’을 지정해 지원 계획을 밝힘으로써 특정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부모연합은 “가족 다양성을 포용하는 국가를 지향한다면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①

글 광대경 기자

인트리 대표는 발언문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은 입양과는 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며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미혼모는 아직도 비정상 가족이라 여긴다”며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들은 엄마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설령 자신이 양육한다 하더라도 편견과 차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이를 홀로 출산하고 미혼모의 삶을 택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비정상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남들과 다르지 않게 아이를 양육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며 “차별과 편견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상의 모든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기본법을 제정해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아동학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선 아동이 가정 내 폭력으로 사망하거나 굶주림과 폭력으로부터 탈출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는 국내만의 사정이 아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학대 증가 배경을 설명하고 일부 실태 결과를 소개한 이후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장희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아동학대의 위험 증가

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서 아동학대는 증가해 왔다(ISPCAN, 202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사회 내 한정적 자원에 대한 경쟁, 지원 서비스와 이용 가능 프로그램의 제약, 교육 및 놀이 공간 등 아동 관련 시설의 접근 제한은 아동과 보호자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9).

코로나19는 아동의 생활 양태를 크게 바꿨을 뿐만 아니라 아동 돌봄과 교육에 대한 가정 내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면서 보호자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와 지역 차원의 이동 제약,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 활동과 사회적 지원이 제한됐다. 아동 관련 돌봄 및 교육 시설의 이용에도 한계가 있어 아동 돌봄 및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가정 내 보호자에게 집중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스트레스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례로,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동과 보호자 각각 337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재난대응 실태를 확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이봉주 외, 2020), 전체 보호자 중 약 73.2%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양육 스트레스 증가를 보고했다.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에 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 그룹에서 더 높았고, '자녀의 매 끼니 챙기기 및 장시간의 돌봄 상황'이 가정 내 어려움이라는 응답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 증가는 필연적 결과로 여겨진다.



보호자의 역할 가중과 스트레스는 아동에 대한 거친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 학대 행위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Humphreys, Myint, & Zeanah, 2020; 장희선, 김기현, 2020).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¹,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아동이 가정에서 장시간 머무른다는 것은 외부와의 교류 및 소통 기회가 적어짐을 의미한다. 아동의 생태체계 중 지역사회 내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아동 관련 시설과 다양한 협의체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체계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부 체계와의 단절은 피해아동의 발견을 어렵게 하기에,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아동이 더욱 심각한 학대에 놓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학대 발생 증가를 우려해야 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Bartlett, Griffin, & Thomson, 2020).

¹ 외부활동 제한으로 외부 모니터링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면서 아동학대 신고는 감소한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월부터 4월 간 교직원 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283건에서 2020년 20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²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학대의 양상은 2020년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결과와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이봉주, 장희선, 신원영, 박주나, 2018) 결과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는 아동의 권리 경험과 환경, 발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해당 조사의 아동학대 문항이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도 적용되었기에 두 조사의 아동학대 경험 결과를 비교했다.
³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 저학년(3학년 이하) 아동의 응답은 보호자가 대리 응답했다. 보호자의 대리 응답이 아동학대의 과소 또는 과잉 보고 가능성이 있지만, 초등 고학년 이상의 아동과 보호자의 아동학대 응답 경험을 비교했을 때 보호자의 응답 경험성은 아동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양상²

2020년 실시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아동학대 경험 비율을 2018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신체학대는 2018년보다 감소했고, 정서학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체벌 경험은 23.9%로 2018년 20.4%에 비해 증가했으며, 이 비율은 미취학아동³ 내에서 31.0%에 달하는 등 어린 아동에 대한 체벌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체벌 경험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 조사결과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및 인터넷 게임 문제로 가족 갈등 발생'을 답한 아동의 비율이 47.6%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사용 및 게임, SNS 활동, TV 보는 것과 관련해서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10명 중 1명꼴(12.9%)로 확인됐다. 보호자와 아동 간 갈등 증가는 아동에 대한 체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탐색된 만큼(장희선, 김기현, 2019),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과 보호자의 갈등 증가를 보여주는 전술한 일련의 결과는 재난 이후 체벌 증가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무엇보다, 체벌과 신체학대 간의 관계를 연구해 온 많은 연구자는 체벌의 빈도 증가와 심각성 심화가 신체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체벌을 신체학대의 예비체로 간주하며(Durran & Ensom, 2020; Fristheler & Gruenwald, 2013), 신체학대는 일반적으로 체벌과 정서학대를 동반하여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Wang & Liu, 2014), 체벌과 신체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데 주목한다(Afifi et al., 2013;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은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을 선언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Greshoff, 2002)⁴. 아동 체벌이 금지되어야 할 이유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학대 유형은 방임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달리 아동이 가정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게 되면서 맞벌이 및 한부모, 저소득 가정 등 많은 유형의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경험했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공적·사적 자원을 제공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용 가능 수준은 저소득 가정 및 소득 상실 가정에서 더욱 낮았다(장희선, 2020). 돌봄 공백의 장기화는 의도치 않은 방임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례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혼자 두지 말아야 할 때 아동을 혼자 두거나’, ‘식사를 제대로 안 챙겨주거나’, ‘술, 인터넷 게임, 쇼핑 등으로 인해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경험을 한 아동의 비율은 2018년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아동의 폭력 경험은 단편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폭력 경험은 ‘정서학대·방임’, ‘체벌·정서학대·다중 폭력’, ‘가정폭력 목적’, ‘정서학대’, ‘저위험’ 등 5가지 폭력 유형으로 구분되어(이봉주, 장희선, 2021), 아동들 간

폭력 경험이 다양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정서학대·방임’과 ‘체벌·정서학대·다중폭력’의 집단에 속하는 아동은 다른 집단에 속하는 아동에 비해 행복감 수준은 더욱 낮았고 외로움과 불안함, 지루함의 수준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부정적 정서 회복을 위해 아동 폭력 경험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아동의 폭력으로 대표되는 보호권은 아동의 우울 및 불안, 비행 및 폭력 행동 등의 부정적 심리발달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이봉주, 장희선, 2019), 아동의 부정적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폭력 근절은 중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라면 형제 사건’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호자의 학대와 돌봄 부재 속에 아동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아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좀 더 강력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는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 보호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20.11.30. 보도).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교육 실시로 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위기아동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며 핵심 쟁점이라 할 것이다.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것은 아동을 학대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누군

가의 도움이 부재한 데서 비롯된다. 지역사회 내 모니터링 체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고위험 가정 및 위기아동을 탐지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 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 협의체가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더욱 촘촘하고 견고한 네트워크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선제적 대응 방안 중 하나로는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관계부처합동, 2020.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를 중심으로 돌봄 인력 충원 및 지원, 온라인 및 대면 모니터링 활성화 체계를 마련하여 사각지대 위기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에선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통합적이면서도 촘촘한 지역 차원의 자원과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지역사회 내 교육기관 및 아동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별 돌봄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안 돌봄 체계를 마련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각지대 및 위기아동이 공적 돌봄 체계 내로 진입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대면 모니터링의 활성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위기 예방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년 학대방지 대책(안)에는 관계기관 협업체계 마련, 시설·인력 등 과감한 인프라 개선과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주기적 점검을 통한 아동보호의 책무성 강화를 계획했다(관계부처합동, 2020).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아동 증가를 우려하면서 아동보호·돌봄 체계 확충이 계획됐다.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공적 대안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공적 돌봄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많은 가정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 상황에 따른 맞춤형 핀셋 정책과 서비스가 가정의 양육과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형태로 책무성 있게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특성과 인프라 및 아동 관련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위기아동에 관한 연계·통합된 정보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협의체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역 단위의 촘촘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높은 지원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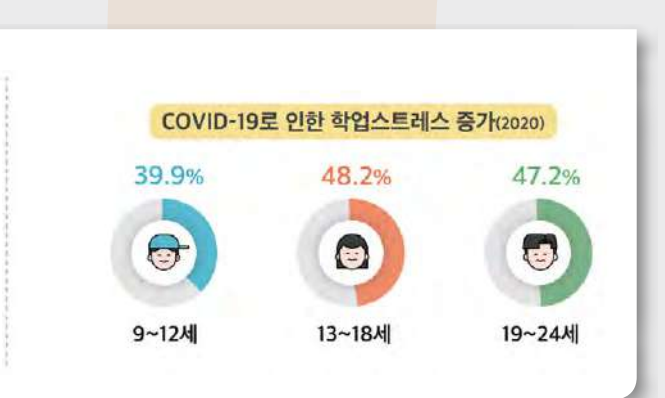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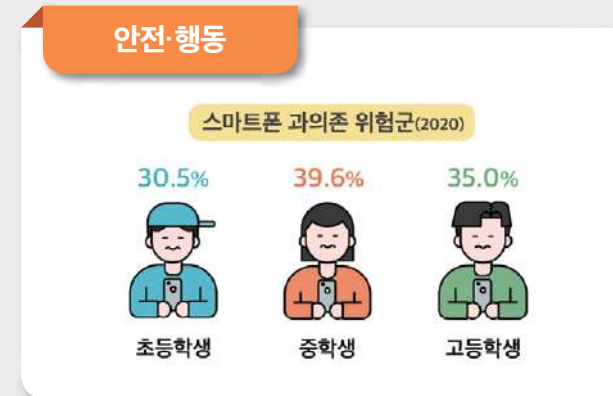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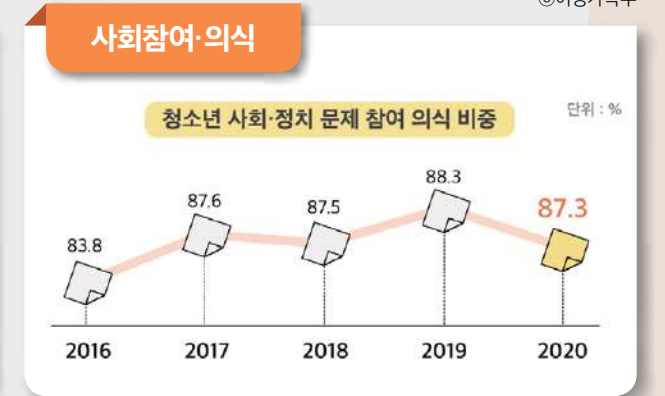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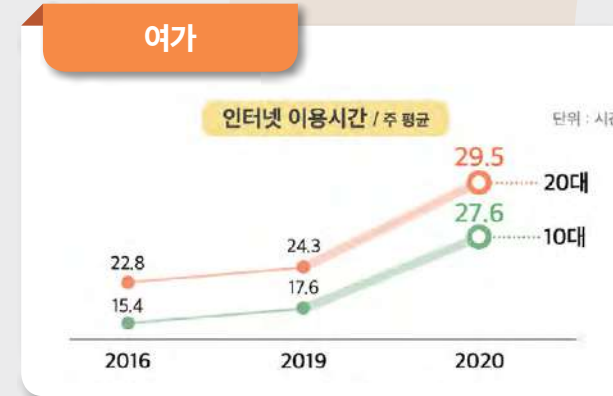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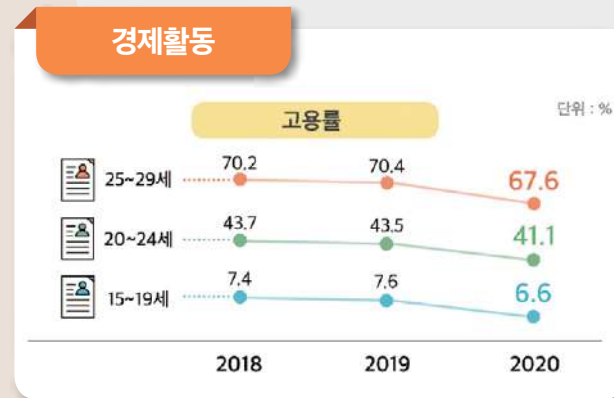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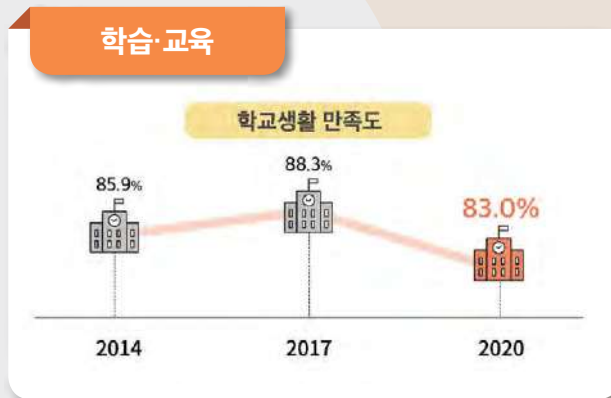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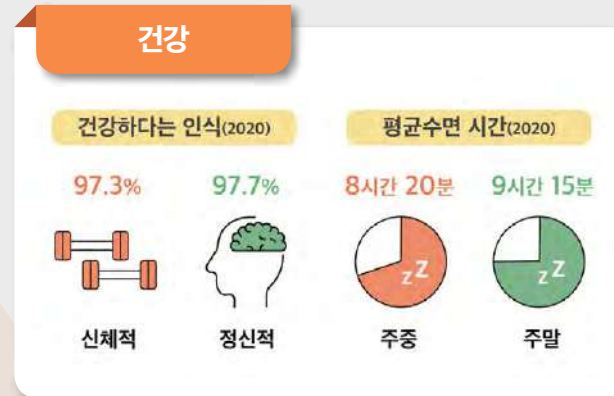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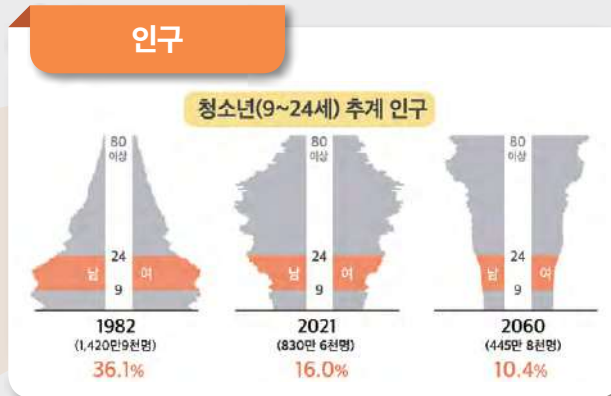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은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을 선언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모든 이의 관심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아동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온전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길 간절하게 바라본다.㉑

* 이 글은 굿네이버스에서 수행한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이봉주·장희선·선우진희·길보라, 2020)’의 분석 결과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필자가 참여한 연구의 일부 내용을 활용해 기술하였습니다.

4. 해당 내용은 장희선과 김기현(2019; 2020)의 연구 중 일부를 인용했다.

코로나19로 학교생활은 부정적, 가족관계는 긍정적 변화

2021 청소년 통계는?



“ESG 경영, 조직 체질 개선 우선돼야”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멤버십 라운드 테이블 포럼 개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사회공헌 동향과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고 우수 사회공헌 사례를 공유하는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멤버십 라운드 테이블 1차 포럼’이 5월 3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2019년 121개소, 2020년 265개소가 인정기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시됨에 따라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멤버십 라운드 테이블 1차 포럼’이 5월 3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ESG와 임팩트 금융’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과 인정기관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ESG와 임팩트 금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환경 부문에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팀장, 사회 부문에 우용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소장, 지배구조 부문에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실장, 임팩트 투자 부문에 김정태 엠와이 소셜컴퍼니 대표가 연사로 참여했다.

비즈니스 의사결정 과정에 ESG 통합해야

이영란 팀장은 ‘공유하는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제성장으로 건강, 지식, 생활 수준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시스템과 자연에 엄청난 비용을 치른 대가”라며 “자연 파괴는 인류의 건강과 삶의 모든 측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팀장은 “코로나19는 인류와 자연이 연결돼 있다는 증거”라며 “1960년대 이후로 인수공통 전염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발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기후위기 인식이 강화되면서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했고 기업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기후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2030년까지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경 실장은 ‘기업 윤리와 투명한 거버넌스’를 주제로 지배구조 부문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지배구조 체계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이사진 및 고위 경영진의 ESG 대응 필요성과 ESG 가치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ESG를 비즈니스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ESG 추진 시 기업의 일관된 정의와 방향 설정, 리스크 관리 전략 등을 강조하며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ESG 이슈에 대한 기업의 방향, 목표와 전략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정제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만들 것

김정태 대표는 ‘임팩트 투자와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임팩트 투자 관점을 통해 사회·환경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신규 고객을 연동해 볼 수 있다”며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E와 S의 영역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소셜벤처나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은 이미 존재하는 외부의 ESG 아이디어를 기업의 자원·재원·인프라·인력과 결합하는 것”이라며 “기업은 소셜벤처나 사회적경

제 기업 외에도 국제기구나 비영리단체, 지역주민과 다양한 협의체와 리빙랩 방식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용호 소장은 ‘지역이 인정하는 시대’를 주제로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사업 영역은 사회적 책임과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정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해 지역사회공헌 성과 모델을 구축·확산하고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소장은 “국민이 원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인지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결과, 임팩트 확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나아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박대경 기자

사회복지협의회, 새로운 역할 모색한다



사회혁신을 통해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이 머리를 맞댔다.

2021 전국사회복지협의회 리더십 워크숍 및 지역 혁신 프로젝트 제안 발표회가 5월 27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됐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는 1부 워크숍과 2부 사회 혁신 아이디어 제안 발표회로 진행됐다.

먼저 워크숍에서는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국내외 사례가 소개됐다.

강충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은 '핀란드의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핀란드의 △사회복지와 의료복지서비스 통합시스템 '아포티(Apotti)' △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해 국민 누구나 건강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칸타 서비스(Kanta Service)' △디지털 의료 데이터와 유전자 정보를 결합한 공공-민간 협업 프로젝트 '핀젠(FinnGen)' △2014년부터 시작해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원격의료서비스 '해피 빌리지(Happy Village)' 등을 소개했다.

강 이사장은 "핀란드는 국민 의료 시스템의 환자 데이터 문서가 100% 디지털화돼 있고 2007년 이후 전자 기록 가용성이 100%에 달한다"며 "이러한 것들이 법·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기능별·체계적으로 통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란드 역시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구조였으나 행정적 통합, 기능적 통합을 거쳐 지역복지 통합 시스템을 완성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복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행정적·기능적으로 통합해 단순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 개발해야

장영배 강빛힐링펜션타운 운영본부장은 '전남 곡성군 강빛마을의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장 본부장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 곡성에 109가구 규모의 은퇴자 마을인 '강빛마을'을 조성했다"며 "국가가 노인복지에 투자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사는 예방적·선제적 노인복지모델 마을을 만들기 위해

5월 27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2021 전국사회복지협의회 리더십 워크숍 및 지역 혁신 프로젝트 제안 발표회'가 진행됐다. 지역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강빛마을은 마을의 입지, 은퇴세대의 고급 인적자원, 시설을 적극 활용한 혁신적·창의적 노력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우수 과제 공모 지원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은퇴세대 주민에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활력을 제공하고 강빛살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이러한 활동이 계속되면 은퇴자 활동가가 만들어짐으로써 코로나 시대 도시 인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혁신 아이디어 공모...부산시협의회 최우수상

한편 2부에서는 지역 혁신 프로젝트 제안 발표회가 진행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의회 중심의 혁신적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예심을 통해 7건의 '지역 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이날 수상자는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들의 온라인 실시간 투표를 통해 결정됐으며 장려상 4팀에는 상금 50만원, 우수상 2팀에는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1팀에는 상금 200만원이 전달됐다.

장려상은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제안한 부산연제구사회복지협의회 △농어촌 생산자와 복지시설 연계를 제안한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벽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안한 이승용 창원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제안한 김유미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과장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폐자전거 리사이클 사업을 제안한 천제진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 IOT 감지센서 활용으로 고독사 방지사업을 제안한 대구 북구사회복지협의회가, 최우수상은 △코로나19 대응 뉴노멀 아카데미를 제안한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각각 수상했다.①

글 편집팀

기고

장기요양제도 시행 13년... 요양보호사 처우 현주소는?

필수노동자로 중요성 부각됐지만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아



정찬미
요양보호사(서울요양보호사협회 부협회장)

11년 차 요양보호사인 필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에서 8년째 일하고 있다. 데이케어 센터는 아침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다가 저녁에는 집으로 모셔다드리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요양보호사 한 명당 대상자 일곱 명을 케어하고 있다. 우리가 돌보는 어르신들은 언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긴장의 연속이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우려로 인해 어르신들도 모두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수시로 마스크를 벗어 감추거나 턱에 걸치고 있기도 한다. 그때마다 다시 마스크를 올려드리는 것도 우리의 일이 되었다. 요양기관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년 선제 검사를 해야 했고, 코로나19 백신도 면역이 약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보다 우선 접종 대상이었다. 낯설고 두려운 감염병 시대에 의료진만큼이나 일선의 현장에서 멈출 수 없는 노동, 일상의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다.

처우개선비 폐지, 장기근속수당은 누구를 위한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13년이 다가오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일한 지 10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똑같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돌봄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오래 근무하며 현장에서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력직 요양보호

사들에게는 맥이 풀리는 처우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의 평균임금은 90만원 남짓이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겐 너무나 낮은 임금이다. 그래서 두 가구 이상 방문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은데 점심을 먹을 데가 마땅치 않아 굶거나 간단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에선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없애고 장기근속수당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 3년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계속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것이다. 시설이나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조금은 안정된 일자리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어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자의적 퇴직이 아니라 수시로 일자리가 중단되기 때문에 장기근속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센터에 대상자가 없으면 일자리가 중단돼 대상자가 있는 다른 센터로 옮겨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현장의 실태를 조사해보고 한 기관 근속근무자가 아니라 같은 직종에서 일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기관을 옮겨 일하는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도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부각된 요양보호사들의 고충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요양보호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 언론에서는 요양병원 감염실태를 보도하면서 종사자가 감염원이 된 듯한 보도를 연속 방영하고 있었다. 보호자들은 두 군데 옮겨다니며 일하는 요양보호사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자기 집 일만 해달라고 요구 아닌 압박을 하고 하루아침에 일을 그만두라고 해 실직자가 된 경우도 많다.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코로나19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코로나19로 인한 요양보호사 일자리 중단이 20.8%, 부분 일자리 중단은 76.2%나 됐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까 항상 불안하다. 대상자 어르신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면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로 인한 요양보호사 일자리 중단이 20.8%, 부분 일자리 중단은 76.2%나 됐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까 항상 불안하다. 대상자 어르신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면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시작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감염병 우려가 가장 높은 기저질환자를 대면 서비스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약국에서 2매씩 판매하는 마스크를 살 시간도 없이 근무를 마치고 약국에 가면 마스크가 떨어졌다는 소리만 듣고 집에 돌아와야 했다. 한 요양보호사는 천마스크에 키친타월을 두 세장 올려 넣어 쓰고서 숨도 쉬기 힘든 상황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되자 정부에선 요양보호사를 필수노동자 직군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은 지속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천마스크를 삶아쓰기도 하고 애꿎은 손만 씻고 또 씻으며 일하고 있다. 돌보는 사람이 건강해야 돌봄을 받는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 정부에서 추가예산을 배정해 최소한의 방역물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양 현장의 특수한 문제들

요양 현장의 성폭력, 성희롱 사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성희롱 경험자는 42.4%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에서 요양 현장 성희롱·폭력 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요양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특히 1:1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성희롱이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대책이 시급하다.

예방책으로는 2인 1조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과 상습적인 성희롱을 멈추도록 대상자 및 보호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요양보호사 대상 성폭력 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심리상담을 받아 치유하도록 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나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일하다 다쳐도 산재로 인정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렵다. 10년 이상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이 생겨났고, 손을 짚 수가 없어 글씨 쓰고 식사할 때도 고통스러워 병원에 가면 수술을 권한다고 한다. 수술을 하면 일을 할 수 없기에 고통스럽지만 참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와상환자를 목욕시키기 위해 어르신을 들어 욕조로 옮기다 허리를 삐끗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요양보호사는 함께 일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자기가 잘못해서 다친 것 같아 미안해하며 자비를 들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한 요양보호사는 업무 중 겨울에 대상자 약을 처방받으러 가다 빙판에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되고 허리를 다쳤다고 한다. 산재보험을 몰랐던 요양보호사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골절된 손목 치료만 병원에서 받고 허리는 한의원에 가



어르신을 돌보며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한다.

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3일 정도 지나 업무 중 다친 것은 산재보험 적용이 될 거라는 말을 듣고 근무하는 센터에 신청해 산재처리가 되었다고 한다. 황당한 것은 같은 날 다쳤는데 골절된 손목만 산재처리가 되고, 허리는 안됐다고 한다. 이유는 노화로 인한 허리 통증이라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산재신청 절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너무 복잡해서 개인이 신청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자비를 들여 치료받거나 복대를 차고 고통을 견디며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요양보호사들은 업무가 끝나고 물리치료도 받고 통증 치료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지자체에 한 곳

이라도 지정되어 있다면 좋겠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돌보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13년이 되었지만 대상자나 보호자, 일반 국민들도 요양보호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가 아파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아는 사람이나 복지 공무원에게 간단한 설명만 들어서인지 파견된 요양보호사에게 '아줌마', '집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업무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 제공되지 않아 대상자 외에 가족의 가사까지 떠맡기기도 한다. 한 방문요양사는 대상자 외에 다른 가족들의 가사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공중파 방송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인식개선 캠페인이 실시됐을 때 호칭 문제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잘 정착되고 좋은 일자리, 좋은 서비스가 되려면 방송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체감 가능한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구현되길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현실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연차와 함께 현장 경력이 더해지고 그만큼 노하우와 전문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어르신을 돌보며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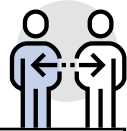
2017년 서울지역 요양보호사들이 모여 만든 당사자 조직인 서울요양보호사협회는 '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주도했고, 현장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서울시가 최초로 설립한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권·건강권·노동권 등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지역 요양보호사들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지역별로 설치된 요양보호사 쉼터를 통해 가까운 곳에서 교육도 듣고 동료들과 함께 쉬을 가지며 소통하고 있다.

특히, 자치구별로 모임을 만들어 월 1회 현장의 현안과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제별 토의를 진행하거나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요양보호사 지위 향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도해왔다. 이 밖에 필수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지역별 요양보호사 포상 제안,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후원물품 지원 및 개별 사례관리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전국에 17개 설치한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확산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는 전국 각 지역의 요양보호사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현장이 체감하는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이 구현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자긍심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좋은 돌봄을 고민하는 현장 조직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현장에서 오늘도 애쓰고 있는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㉞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을 가다

문화 소외계층 위한 재능기부로 사회적 가치 창출한다

호재, 사회적 기업 친환경 제품 기획 및 판로 개척

울산 남구에 위치한 '호재'는 플랫폼 기업이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호재는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편집숍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5월 롯데백화점 울산점에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판매하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어반그린' 매장을 오픈했으며,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기획·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어반그린에서는 울산 지역 장애인 및 취약계층,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라탄과 죽공예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예 강좌를 운영 중이다.

호재는 최정숙 대표의 재능기부활동을 계기로 시작했다.

최 대표는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해 재능기부 봉사를 많이 다녔다. 그러다 어르신들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분들이 여가생활을 하며 용돈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쌓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후 2018년 공예기법을 단순화해 누구든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제품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이디어로 SK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돼 2019년 창업에 이르게 됐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이주여성 위한 공예교실 운영
호재의 사회공헌 활동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공예교육이다.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실 아동을 대상으로 '친환경 라탄 바구니 만들기교실'을 운영 중인데, 아이들은 자연소재를 활용해 쓰임이 다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바구니를 만들면서 환경교육과 공예교육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울산 청소년센터와 협약해 생활용품을 만드는 '원인프로젝트', 이주여성의 힐링을 돕는 '라탄공예교실'도 운영 중이다.

이 외에 '신중년 그린공예메이커스 라탄지도자 과정'을 통해 제2의 삶을 꿈꾸는 이들이 지역공예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공예로도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전파하기 위한 문화강좌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재능기부 사회공헌의 보람을 몸소 느끼고 있다.



호재는 지역사회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라탄공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최 대표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라탄공예교실을 진행했는데, 공예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관심이 대단했다"며 "완성작을 보고 생활소품으로 활용할 생각에 대화를 나누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공감하고 추억과 경험을 쌓는 감정적 연대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호재는 6월부터 울산 남구청과 지역자원 특화사업을 시작한다. 울산에는 태화강십리대밭이 유명한데, 관광자원으로만 사용되다 보니 매년 자라나는 대나무를 잘라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있다. 이에 대나무를 친환경 생활용품 제작에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예교육으로 전문가를 양성해 생활용품을 만들고, 이를 지역 특산물화해 판로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지역에서 순환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자원을 활용해 인적자원을 양성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인재를 통해 취약계층에 사회공헌이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호재는 앞으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소재의 지역자원을 개발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취약계층이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문화기획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글 권대경 기자



나는 사회복지사다

‘여러분이 진정한 슈퍼히어로’... 응원과 격려에 큰 힘

마스크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 즐길 수 있기를



심미지 행복요양병원 사회복지사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상 출·퇴근하는 직원 중 한 명이 감염되면 단시간에 병원 내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직원들은 일주일에 2회씩 필수적인 코로나19 감염병 선제 검사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

고 있다. 나 또한 요양병원 종사자라는 책임감과 동시에 무거운 부담감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기 이전만 해도 행복요양병원에는 매일 음악회, 미술치료, 실버레크리에이션, 그리고 동물 매개치료 등 외부 봉사자들의 재능나눔으로 신나고 활기찬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곤 했다. 환자들은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난 음악회가 가장 좋아요. 음악을 들으면 너무 신나~”라면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힘들었던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고 “난 색칠을 하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서 미술치료 시간이 제일 좋아요~”라며 오랜 병원생활의 무료함을 떨쳐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의 원내 방문이 제한되고 모든 집합 프로그램과 행사가 중단됐다. 답답하고 불편한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리며 보고 싶었던 가족들의 손을 한번 맞잡아보지도 못한 채 창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환자와 직원 모두는 당연하게 해왔던 것을 하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이전과 이후로 병원생활이 크게 나뉜 것이다.

미용사가 되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월 8팀의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해 280여 명의 환자 머리를 깔끔하게 단장해 줬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외부인의 원내 출입제한으로 인해 장발이 되어가는 환자들의 불편함과 불평이 가득했다. 환자들은 “밥만 먹고 머리만 기나벼~”, “환자는 머리가 깔끔해야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슈?”하며 1층으로 내려와 한마디씩 불평을 하고 올라갔고, 간병 보호자들은 “머리 자르러 언제 와요? 우리 어머님 머리가 벌써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 출입이 제한돼 직접 이·미용에 나선 심미지 사회복지사



미술치료 프로그램 환자 작품 마무리작업

이만큼 자라서 귀신가터요~”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미용이 진행될 때면 옆에서 자원봉사자 관리를 했던 내가 두 손을 걸어붙이고 직접 미용사가 되어 보았다. 아무리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지만 처음 해 보는 거라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고 공부도 하며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큰 부담감을 갖고 서툰 솜씨로 한 분 한 분 머리를 해 드렸다. 환자들은 날이 갈수록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며 용기도 불어 넣어주고 “사회복지사 때려치우고 미용사 하러 가면 안디야~”하며 장난도 치곤하셨다. 이·미용을 하고 난 날이면 허리도 어깨도 너무 아팠지만 머리를 깔끔하게 단장한 후 환한 표정을 짓는 환자들을 보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환자들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애써준 수많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 그들의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병원 앞 통유리 창문을 가득 메운 보호자들의 응원과 격려 메시지



창문을 통해 전해지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 사이에는 이산가족 현장과 닮은 그라운드와 애뜻함이 공존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했고, 창문에 사이에 두고 진행되던 비대면 면회조차 어렵게 됐다.

하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코로나19 관련 기사와 일일 확진자 수를 확인하며 울적한 마음으로 출근했는데 병원 앞 통유리 창문에 눈이 갔다. '여러분이 진정한 슈퍼히어로', '행복병원이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이겨내요~!', '행복요양병원이 있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등 알록달록 포스트잇에는 직원들을 위한 응원과 격려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가족을 만날 수 없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모든 직원의 이름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응원해 주는 보호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다시 한번 이 직업에 큰 자부심을 가지며 울적했던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

중앙정원, 치유의 공간

우리 병원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병원 내에 중앙정원이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원은 환자를 위한 힐링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마음이 힘들고 업무가 고단할 때 이곳에 와 물레방아 물소리를 들으며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신기한 치유의 공간이라 환자뿐만 아니라 나 또한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사방이 탁 트인 이곳에서 음악회를 진행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하고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환자, 직원 모두가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들은 병동 유리창을 통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환자·직원을 위한 중앙정원 음악회 모습



해 중정을 내려다보고 열린 창문을 통해 음악을 감상하면 되기에 감염 위험 걱정도 없었다.

"창문 열고 옆 환자 간 거리 유지하며 마스크 필히 착용 후 음악회를 감상해 주세요."

2층부터 5층까지 병동을 몇 번을 돌며 소리쳤다.

"아휴, 너무 기다렸는데 드디어 보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공연이 진행됐고 재즈음악이 중앙정원과 병원 밖으로 울려 퍼졌다. 휠체어와 함께 병동 로비 창문 앞에 자리를 잡고 소녀처럼 물개박수를 치는 분, 감동 가득한 눈빛으로 공연을 즐기는 분, 동영상을 찍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분 등 많은 환자들이 함께 공연을 즐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다.

코로나19 이전처럼 병원 내에 늘 신나고 흥 넘치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불편하고 답답한 마스크 없이 환자들과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줄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01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 두기

02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0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04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05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최종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심각한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서 복지지출 감당 위한 장기적 관점의 논의 절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가치와 원칙만을 따라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최종윤 국회의원을 만나보았다.



21대 국회 입성 후 상임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고 또 활동하고 계신데 선택하게 된 동기는?

“2017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선언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장·차관이 참석하도록 한 정책운영위는 국·과장 및 심지어 사무관 대참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공감대가 낮고, 의지도 없어 보였다. 인구 문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확충, 병역 자원 확보,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노인 부양과 다양한 가족 형태 등의 문제 △‘인구 이동의 집중성’에 따른 지방 인구 소멸이나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인구 문제는 사회 전반의 복지 문제라고 생각해왔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해 선택하게 됐다.”

지금까지 보건복지 관련 입법 활동 중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환자의 안전과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불법 지입구급차 근절법’인 응급의료법을 발의해 올해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구급차를 개인이 사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고, 구급차 운용자가 명의를 대여할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부터 불법 지입구급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21대 국회에서 이뤄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또한 민주당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발

의자로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대비·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 기억이 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색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17년 역사적인 판문점 정상회담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데, 감염병 공동 대응 등 보건의료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코로나19 대책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 예방, 치료 3박자가 함께 가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K-방역의 성과는 국민이 감내하며 동참해 준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수급과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면 코로나19 예방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감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역시 치료제를 통해 증상이 사라질 수 있다면,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질 것으로 믿는다.”

저출산 문제의 위기의식을 어느 누구보다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걸로 아는데,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조언한다면?



각종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인구 정책은 초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바퀴를 반대로 돌리고자 하는 시도였다. 예를 들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면 이 현상이 완화되거나 해소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인구 정책은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큰 틀에서의 적응과 기획으로 봐야 한다. 초저출산과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작년 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올해 초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가족의 개념 재정의 등을 통해 가족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 초저출산 현상은 인구 이동 현상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초저출산 현상은 결과로 봐야 하고, 그 현상의 원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성장을 하면서 수도권만을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자원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자원이 집중되고, 이는 다시 그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지며, 결국 생존 본능이 재생산 본능에 우선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라기보다는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전면

적인 틀을 바꾸고, 그에 따라 적응과 기획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화두가 되면서 의료분야의 비대면 진료라든지 복지분야의 ICT 기술을 기반한 돌봄 케어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얼마전 AI 스피커가 노인 생명을 구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갑자기 쓰러진 독거노인이 AI 스피커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 생명을 구했다고 한다. AI 스피커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스마트 돌봄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작감지기 등 기본적인 안전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넘어서 적극적 수준의 돌봄 욕구 충족을 위한 장비 등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장비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실내용 스마트 이동기기, 건강 상

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운동기능 향상 기능까지 있는 스마트 의복 등 ICT 융합 스마트 케어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돌봄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융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 주도의 스마트 돌봄은 시설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데, 노인 실태조사 결과 어르신의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따라서 어르신을 위한 주거와 의료, 돌봄, 여가를 제공하는 고령자용 영구주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AI 스피커 등을 설치해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은 물론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픈 목표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인구 문제의 연장선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의 초석을 놓고 싶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0.84명으로 집계됐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도 발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 합계출산율은 더욱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른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 쇼크’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의 형태로 급속히 바뀌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해 재정수입은 줄어들고 동시에 복지지출은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보면 제도 개선 없이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도 2020년 810만명에서 2060년 1800만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평소 가장 관심이 가는 사회복지분야와 그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K-방역의 성과는 이분들의 희생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넓고 깊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넘어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은 복지제도에 있어 임금근로자든 자영업자든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각종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옳은 일, 해야 할 일, 국민과 시대가 원하는 일에 눈치를 보지 않은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진부한 말이지만 이것이 정치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가치와 원칙만을 따라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초심이다. 이것만 지킨다면 지금 산적한 많은 정치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국민이 가라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글 전우일 편집장 사진 이정수

박미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정신건강 환경 변화 주도하는 협회 만들겠다”

박미옥 회장은 협회의 주요 현안으로 △인프라 확충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확대 방안 마련 △서비스전달체계에서 정신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꼽았다.



먼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정신질환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직업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문화, 교육, 거주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정신재활시설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이다. 2002년 3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82개의 회원 시설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당사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공약이 있다면?

“‘Cool Head! Warm Heart!’ 합리적인 판단, 회원과 함께하는 따뜻한 가슴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를 만들겠다는 가치 아래 ‘정신건강 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협회,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가는 협회, 같은 가치로 허들링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함께 진실함을 나누는 ‘관계의 힘’이라고 한다. 정신재활시설은 지역별·시설 유형별로 다양한 전략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법률자문단 상시 활용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시설 간 교류를 활성화하며 시설 모두가 같은 가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회원 시설들이 강력한 연대의 힘을 경험했으면 한다.”

협회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첫 번째는 인프라 확충이다. 2021년 현재 전국에 총 348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절반가량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기초지자체 228개 중 104개에는 아직 시설이 설치가 안 됐을 정도이다. 두 번째는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확대 방안 마련이다. 2016년 5월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법’ 내용에 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관련 복지서비스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 확보 부재와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으로 법률상으로는 존재하는 실체 없는 명문 규정이 됐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 확립과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세 번째는 서비스전달체계에서 정신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다. 정신병원을 퇴원한 당사자가 지역사회로 돌아올 경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거나 중복돼 있어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박미옥 회장은
“인력 충원과 균형적인 임금 지원, 전문직에 대한 안정 체계 마련 등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텐데 협회 차원에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정신재활 시설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설 종사자와 당사자 간 접촉 최소화 및 비대면 강화 조치로 시설이 휴관하고 대다수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정신재활시설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더욱 고립되고 격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부족한 인력으로 여러 명의 생활인을 감당하거나 1명의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대체할 만한 여력이 없기에 더욱 민감하고 소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하나금융나눔재단 등 후원단체를 통해 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관련 물품을 시설에 지원했다. 또한 화상회의 서비스, 뉴스레터 등을 통해 지방협회 및 회원 시

설과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재난 상황에서 회원 시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대응할 수 있게 하고, 회원시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회원 시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수준을 진단한다면?

“급여체계와 근로조건으로 나누어 보면, 우선 급여체계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 재정상황 등 역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와 수당도 다른 상황이다. 정신재활시설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직종이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설이 소규모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급여와 수당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은 일반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르게



정신건강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자격수당 및 경력 등도 지자체마다 달라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근로조건이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2교대 근무형태와 1인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과중한 근로시간에 노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령에 따른 근로시간 단

면서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고 이들이 일상적인 시민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변화를 기대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체적 내용 부재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시행령, 시행규칙에 서비스 내용, 제공 주체,

의 신장 및 인권 강화'의 핵심과제가 수립됐다. 그 어느 때보다 정신건강환경의 빠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이끌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협회가 됐으면 한다. 현장에서 정신장애 당사자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정기적인 '정책포럼'을 만들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신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혐오적인 시각이 있다. 정신과적인 치료 이후 지역에 돌아온 이들의 사례관리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임을 모든 국민들이 알았으면 하고, 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해결 방법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내년 대선을 준비하며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복지계가 함께 연대해 대응함으로써 소외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모든 국민이 좀 더 체감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

글 이성우 기자

박미옥 회장은 "사회복지계가 함께 연대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모든 국민이 좀 더 체감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축 적용으로 생활시설은 법정근로시간 준수라는 큰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이는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지자체가 인지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는 여전히 과중한 근로시간과 지역마다 상이한 임금체계의 노동환경에 머물러 있다. 인력 충원과 균형적인 임금 지원, 전문직에 대한 안정 체제 마련 등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예산 관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복 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의 역할 강화 및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기능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을 한 가지만 꼽자면?

"올 1월에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정신재활시설과 관련된 일부 내용 중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추진' 내용 전략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정신질환자 권

현재의 복지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

나의 경험을 사회적 가치로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뉴스타트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상우리가
기업의 퇴직(예정)자들이 맞춤형 이론교육과 생생한 현장실습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로 진출하거나 경험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20년도 154명 수료, 103명 일자리 연계(연계율 66.9%)

참여대상

기업 퇴직(예정)자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 내지 창업 지원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모집인원

교육 기수당 30명 내외 선발

모집기간

6월 14일~6월 27일(뉴스타트 10기생)
20년도 1기~6기 운영 / 21년도 7기~14기 운영 예정

지원내용

4주간(총 60시간)의 기본교육 및 현장실습, 창업 및 창작 활동
※교육비 일체 무료

참여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02-2077-3951)
(주)상상우리 커리어컨텐츠팀(02-6388-7939)





사회복지사 26만명... 내년부터 양성 커리큘럼 강화

일본은 1987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35년째를 맞이하는 일본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불어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커리큘럼과 그 특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글 오세웅 리츠메이칸대학 산업사회학부 부교수

사회복지사의 활약상을 그려낸 NHK 드라마 'Silent Poor'

'사일런트 푸어(Silent Poor)'는 2014년 NHK에서 방영된 드라마다. 보기 드물게도 지역복지의 중추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커뮤니티 소셜워커의 활약상을 그려내고 있다. 여주인공 '히토미'라는 인물과 스토리는 실제로 오사카 토요나카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카츠베 레이코 씨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드라마는 독거노인, 치매노인, 히키코모리 청년, 홀리스, 외국인 노동자, 재해 피난민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어 지원이 필요한, 즉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입과 지원을 드라마틱 하면서도 현장을 매우 적절히 반영하면서 그려내고 있다. 당시 시청률은 5.3%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끈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에게는 많은 공감과 인기를 얻었다. 사회복지 관련 대학 교원들도 드라마를 통해 사회복지의 매력과 사례를 전달하는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필자도 그중 한 명이다. 이 드라마

는 사회복지사의 인지도 향상과 함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관심이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점과, 사회복지사의 활약상에 비해 처우와 사회적 지위가 여전히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 배경과 현황

사회복지사는 1987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전까지도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이 있었고, 물론 사회복지 전공학과를 둔 대학도 있었다. 법 제정 이전까지는 주로 전후 미국에서 도입된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중심으로 양성교육이 이루어져 왔지만,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 복지 니즈의 다양화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양적, 질적 확대를 거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통일되고 체계적인 양성이 요구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1985년에 일본은 이미 고령자율이 10%를 넘어 복지욕구가 증대되던 시기였다. 점차 재가복지체

제의 정비와 민간 실버서비스가 등장·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질 확보와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86년 8월 동경과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23회 국제 사회복지회의와 그 관련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복지 전문직화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그 자리에 있던 국내의 복지 관계자, 특히 사회복지학계 관계자들이 이를 공유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도 법제화의 촉진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법 제정을 위한 일련의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됐고, 이듬해 1987년 5월에 법이 공포됐으며 1989년부터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이 도입됐다.

한편 도입 당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관련해 사회복지사를 업무 독점으로 할 것인지, 명칭 독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업무는 일련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의사나 간호사 등과 같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 독점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타 직종을 배제하기보다는 명칭 독점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법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사회복지사'라고 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제도와 구별되는 특징이라 하겠다.

또 다른 차이점을 들자면, 일본은 사회복지사를 등급 없이 국가시험 합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복지계열 4년제 대학 등에서 지정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더라도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 장애인에 대한 상담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정신보건복지사'가 사회복지사와는 별도로 1997년 정신보건법을 통해 법제화되어 자격증이 분립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 공통과목을 설정하고는 있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복지 영역별 개별 자격증화, 혹은 난립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과 전문직으로서의 권위, 가치 등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점이 지

적돼 일원화 논의도 있었지만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복지계열 대학 졸업 이외에도, 비전공자나 현장 경험자를 위한 일반 양성시설(1년 이상)과 단기양성시설(6개월 이상)에서의 지정과목 이수를 통해 수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989년에 실시된 제1회 국가시험 당시에는 수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어 수험자 1033명, 합격자 180명으로 합격률 17.4%를 기록했다. 그다음 해부터는 대략적으로 합격률 20%대를 보였고, 과거 최고 합격률은 31.4%다. 최근까지도 20%대 후반의 합격률이 유지되고 있고, 매년 1만 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다. 2021년 현재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약 26만명이다.

2022년부터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커리큘럼 강화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은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커리큘럼을 재정비 한 바 있다. 최근 다시 한번 포괄적 지원체제 구축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력 강화라는 사회복지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실천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 양성 커리큘럼이 개정돼 2022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사회복지사 양성 교과목 구성은 아래와 같

사회복지사 양성 교과목 구성(개정 후 2022년부터 시행) ()는 교육시간

- 의학개론(30), 심리학과 심리적 지원(30), 사회학과 사회시스템(30), 사회복지의 원리와 정책(60), 사회복지조사의 기초(30), 소셜워크의 기반과 전문직(30), 소셜워크의 기반과 전문직(전문)(30), 소셜워크의 이론과 방법(60), 소셜워크의 이론과 방법(전문)(60), 지역복지와 포괄적 지원체제(60), 복지서비스의 조직과 경영(30), 사회보장(60), 고령자복지(30), 장애인복지(30), 아동·가정복지(30), 빈곤에 대한 지원(30), 보건의료와 복지(30), 권리옹호를 지원하는 법제도(30), 형사사법과 복지(30), 소셜워크 연습 I (30), 소셜워크 연습 II(120), 소셜워크 실습지도(90), 소셜워크 실습(240)



이, 필수 이수과목 총 23과목, 교육시간은 120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수과목 재편과 통합적·실천적 교육의 강화가 주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개정된 과목 구성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공생사회 정책에 발맞춰 다기관 협동에

의한 포괄적 상담지원체제 구축과 관련된 지식을 다루는 '지역복지와 포괄적 지원체제' 과목의 신설이다. 기존의 지역복지론에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보다 통합적 관점을 강화한 과목이라 하겠다. 그 외에도 소셜워크 과목(=실천론, 실천기술론)을 재구성하여 강의-연습-실습의 학습순환 강화, 정신보건복지사와의 공통과목 확대, 선택과목이었던 일부 과목 군을 모두 필수과목으로 전환하는 등의 과목 재편이 있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수시간을 기존 18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실습기관도 기존에는 단일 기관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반드시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실습을 받도록 한 점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력 배양을 위해 다직종·다기관 연계, 사회자원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이 가능토록 함이 그 의도라 하겠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사 양성대학, 학과의 실습지도 교육과정 편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기존에 많은 대학들이 3학년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을 통해 집중적으로 현장실습을 하도록 편성하고 있지만 60시간이 늘면서 2학년 여름, 혹은 겨울학기, 그 외에 정규학기 중에도 실습을 일부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장실습 강화는 사회복지사의 실천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전보다 많은 실습생을 받고 지도해야 하는 현장의 업무 과중을 염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회복지 현장 실천-연습과목의 특징

일본의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의 특징은 '사회복지실습' 과목 이수를 전후로 한 '사회복지 실습지도'라는 사전·사후 교육(90시간)을 별도 과목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목은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교육과 사후교육으로 나뉘는데, 사전교육에서는 실습 목표 및 구체적인 달성 목표 설정, 기관에 대한 기본 교육 및 기관 방문 등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사후교육에서는 현장실습을 통해 체득한 사회복지실천기술·지식에 대한 점검과 함께 통합적 사회복지실천의 관점에서 타 기관 실습생과의 토론, 사례발표 등을 통해 배움을 체계화하고 전문적 피드백을 받고,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실습 성과를 보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사회복지실습(240시간)'은 원칙적으로 실습지도교원이 매주 현장을 방문해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실습 기간 중 반드시 1회는 방문지도도를 하고 나머지는 학생이 학교에 와서 지도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한편, 실습 관련 과목과 연동해서 소규모 그룹지도방식을 통해 실천방법론 등을 학습하는 '사회복지 연습(총 150시간)'이 필수과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습 및 연습과 관련된 과목들은 수강정원 20명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하도록 규정해 교육의 질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면 현장실습 및 실천기술론 관련 과목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체계적인 개별지도가 가능한 커리큘럼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 배치기준 강화와 처우개선 필요

사회복지기관 등의 사회복지사 배치 현황을 보면, 위에서 살펴본 사회복지사 배출 인원이나 총실한 교육내용을 고려할 때 의외로 저조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주요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의 상담원·지도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유자격자 비율을 보면 기

관별로 평균 14~29% 정도만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복지행정기관인 복지사무소의 경우도 약 13% 전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복지의 중추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도 7%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있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가 사회복지사(2급 포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이처럼 사회복지사 배치가 저조한 것은 일본은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에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필수 배치 규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고령자복지 관련 기관인 지역포괄지원센터만이 사회복지사 필수 배치가 규정돼 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직을 별도로 채용하는 지자체도 소폭이나마 늘고 있고,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사회복지사 배치 시 수가 인상이 적용되는 등의 인센티브로 인해 사회복지사 유자격자 채용이 늘어나고 있어 더디기는 하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사회복지 교육계는 사회복지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분야에서 필수 배치를 요하는 자격증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사회복지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이며 심하게 표현하자면 사회복지교육의 모순이자 딜레마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사 평균 연봉은 정규직 기준 20대 284만엔, 30대 335만엔, 40대 407만엔, 50대 482만엔으

〈표〉 사회복지사와 타직종 급여 비교 (2020년 기준)

	20대	30대	40대	50대
전 직종	346만엔	436만엔	517만엔	545만엔
사회복지사	284만엔	335만엔	407만엔	482만엔
간호사	423만엔	491만엔	519만엔	555만엔
약사	411만엔	576만엔	631만엔	628만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359만엔	418만엔	480만엔	553만엔

로 전 직종의 평균에 비해 약 80% 수준이다. 보건복지영역의 타 직종(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전문성과 업무의 중요성에 걸맞은 급여보장이 요구되지만, 이 또한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우선적 해결과제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하다. 관련 분야인 개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개호복지사 등 케어직의 급여수준이 더욱 열악하다는 점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이 공감하는 전문직으로 자리 잡기를

사일런트 푸어의 주인공 사토미는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매일 동분서주하며 때로는 다른 주민들의 쌀쌀한 눈빛과 오해를 받으면서, 때로는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싸워가면서, 때로는 주말을 반납하고 내 삶은 뒷전으로 하면서까지 사람들을 돕는데 여념이 없다. 그런 모습이 일반 대중에게는 정 많고, 인간미 넘치는 정의의 대변자로서 드라마 주인공다운 모습으로 비칠 것이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치열한 현장의 모습이며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기 위해 분투하는 자신들의 모습과 오버랩 됐을 것이다.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사가 대중화되고 사랑받는 직업이 된다는 것은 사회복지계가 바라던 바이다. 하지만 '좋은 일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에서 그칠 게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인권전문가, 협력과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재생 전문가, 서비스 조정과 개발 등 사회서비스 전문가 등 각종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직으로 바라봐졌으면 하는 욕심을 내본다. 그런 전문성에 기반한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급여 등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사가 대중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전문직으로 더욱 거듭나기를 바란다. ㉠

네덜란드

저소득층 식품 지원 ‘푸드뱅크’... 최대 3년간 지원

네덜란드에는 전국적으로 172개의 푸드뱅크가 시별로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갖고 운영되며, 500여 개의 픽업 지점이 있다. 약 16만여 명의 국민들이 푸드뱅크를 매주 이용하고 있다. 푸드뱅크 운영 현황과 관련 이슈를 소개한다.

글 장성아 네덜란드 해외통신원

네덜란드의 푸드뱅크는 식료품 구매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위급한 상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푸드뱅크에서 제공하는 식품박스는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 모든 구성원이 약 3일간 섭취할 수 있는 양이다. 푸드뱅크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은 수입에서 모든 공과금과 세금

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식품과 의류를 구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해당된다. 예를 들어 1인 거주자이고, 자녀가 없고 의류와 식료품 구입을 위한 잔액이 230유로가 넘지 않을 경우 해당 자격이 된다.

또한 자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저축액도 확인하는데,

〈표〉 푸드뱅크 이용 자격

파트너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기준 잔여 수입	파트너와 동거하는 경우	기준 잔여 수입
자녀없이 1인 거주	€ 230	자녀없이 거주	€ 325
자녀 1명 동거	€ 325	자녀 1명 동거	€ 420
자녀 2명 동거	€ 420	자녀 2명 동거	€ 515
자녀 3명 동거	€ 515	자녀 3명 동거	€ 610
자녀 4명 동거	€ 610	자녀 4명 동거	€ 705
자녀 5명 동거	€ 705	자녀 5명 동거	€ 800
자녀 6명 동거	€ 800	자녀 6명 동거	€ 895
자녀 7명 동거	€ 895	자녀 7명 동거	€ 990
자녀 8명 동거	€ 990	자녀 8명 동거	€ 1085



푸드박스 구성 사진
사진출처 <https://voedselbankcapelle.nl>

파트너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저축액이 750유로 미만이고, 파트너와 동거하는 경우는 1500유로 미만이 기준이 된다.

전국 172개의 푸드뱅크는 매년 푸드뱅크 이용자의 자격을 검토하며, 푸드뱅크 이용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된다. 3년이 다 되는 경우 전문가와 이용 만료자가 앞으로 어떻게 식품 구입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검토한다. 3년 후에도 이용자가 스스로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경우 개인적인 상황을 살펴본 후 해결 방안을 검토한다.

푸드뱅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용자들에게 식품박스를 나눠주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일주일 섭취를 고려한 양의 식품을 저장할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들은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다.

푸드박스는 최대 5대 영양소를 고려해 구성되며, 시에 따라 혹은 박스에 따라 메뉴가 함께 프린트되어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들이 학교에 가져갈 간식도 별도로 제공된다.

푸드뱅크 로테르담, 푸드마켓 오픈

푸드뱅크 로테르담은 푸드마켓을 오픈했다. 이용자는 네 개의 픽업 포인트 중 원하는 날을 지정해 방문한 뒤 원하는 식품 구성 박스를 선택할 수 있다. 푸드마켓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 필요한 식품 구성을 다르게 하는 등 이용자들이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부하는 업체에게도 편리한 물류 지점을 제공하고 기부자와 자원봉사자, 이용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푸드뱅크 로테르담이 운영 중인 푸드마켓
사진출처 <https://www.voedselbank.nl>

푸드뱅크 운영을 위한 다양한 모금활동

자이스트(Zeist)의 초등학교에는 유독 이슬람 국가 출신의 학생이 많다. 이 학교는 이슬람 종교의 라마단 기간 동안 라마단의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하고자 푸드뱅크 모금 행사를 시작했다. 이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돼 3400여 개의 식품을 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었다.

낚시동호인연합회 하에스페이(HSV)는 1300여 명이 참석하는 낚시 대회에서 잉어 한 마리당 5~25유로, 기타 물고기는 1유로의 기금을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낚시로 잡은 잉어는 기금 될 금액으로 기록한 후 바로 물에 놓아준다. 참고로 네덜란드에서는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후 먹지 않고 놓아준다.

네덜란드 푸드뱅크 알미르 지점에서는 기금 모금을 위해 두 명의 대학생이 3일간 창고에 자체 감금되는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회 불공평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네덜란드는 장기간 락다운으로 레스토랑, 스포츠, 문화 관련 사업자, 자영업자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창고에는 비상식량이 준비되어 있고 이 행사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슈퍼마켓 움보(Jumbo)의 한 지점은 각 계산대 옆에 푸드뱅크를 위한 모금함을 배치해 고객들이 계산하다 남은 잔돈을 기부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일시적 모금행사를 마련했다. 전국 움보 슈퍼마켓에서는 각기 지점별로 중종 모금행사를 마련한다.



사진출처 <https://www.ad.nl>



난처한 정부 지원

식품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할인 판매해 최대한 식품 폐기를 방지하고 있어 이들의 식품 기부가 감소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네덜란드의 푸드뱅크 이용자는 약 10% 증가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푸드뱅크의 식품

부족 현상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 구매를 위한 별도의 기관을 개설하고, 4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외에도 유럽 식량 기금에서 2022년부터 8년간 8만 유로의 지원금이 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푸드뱅크 보조금은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다. 푸드뱅크 운영은 기본적으로 업체들의 식품과 자금 기부로 운영되고 전 지점의 운영자 및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푸드뱅크에서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일은 없었다. 이 지금은 이용자가 약 50% 증가했을 때도 모든 이용자에게 푸드박스를 증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여유자금으로 인해 기부자들이 장기적 기부를 거부하고 있어 일시적인 정부의 도움으로 인해 더 큰 도움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정부는 식품이 부족할 경우 식품을 구입하라고 자금을 보조했지만, 유통기한 만료 직전의 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식료품 업체에서 식품을 구입한다면 업체들도 기부 대신 푸드뱅크로부터 판매 수익을 올릴 것을 기대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푸드뱅크에 걸림돌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지원금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모아소 행복+ 소비캠페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에서는 전체구매 예산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1670-1030)

장애인 의무고용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한 "연계 고용제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에 따른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등)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031-728-7248)

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모든것

Daum **장애인생산품 모아소**

독일

어린이집 정원 확대·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

독일의 '좋은-어린이집-법률' 실시와 이에 따른 보육교사 양성과정 확대, 근무 여건 개선, 보육 내용에 대한 학술적 지원, 모범적인 어린이집 발굴과 시상 등 전반적인 어린이집 보육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글 배지혜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육학 박사과정

“○○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학대하는 사건은 사회 문제로 드물지 않게 언론에 등장한다. 방치 대책으로 CCTV 설치와 보호자의 열람 권한 제공, 보육교사 개인에 대한 처벌이나 어린이집 운영 제한 등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사후대책에 머물러 근본적인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만 3세 이상 이던 보육 희망 연령이 낮아지고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등원을 희망하면서 지난 수년간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보육 복지 규모 성장과 그에 따른 어린이집 정원 부족 문제 및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 등은 한국과 독일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다만 독일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일이 비교적 드물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연방 정부의 통 큰 투자, '좋은-어린이집-법률'

2018년 12월 독일의 연방 하원은 어린이집 정원 확대와 개선을 위해 55억 유로(한화 약 7조4250억원) 상당의 재원 마련을 의결했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하 가족복지부) 장관은 해당 재원을 활용한 '좋은-어린이집-법률(Das Gute-KiTa-Gesetz)'의 시행을 발표했다.

목표를 살펴보면 △가정의 일상에 맞춰주고 △모든 어린이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며 △인격적인 보육교사와 합리적인 관리자가 일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과 건강한 음식, 양질의 언어교육을 제공하며 △교직원이 서로 협동하고 △소외되는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집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역에 배정된 재원을 수령하기 위해 16개 주 정부는 어린이집 정원 확대와 보육교사 양성 등의 계획을 세우고 해당 내용을 주의 법으로 제정했다.

가장 먼저 연방 정부와 협의해 '좋은-어린이집-법률'을 제정한 지역은 브란덴부르크 주로 2019년 2월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 질 향상을 위해 배정된 1억6400만 유로(한화 약 2210억원)를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2018년 12월 독일의 연방 하원은 어린이집 정원 확대와 개선을 위해 55억 유로(한화 약 7조 4250억원) 상당의 재원 마련을 의결했다.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결정했다. 주 정부는 사전에 주의회 교육위원회의 주최로 보육 전문가 협의를 통해 네 가지의 방침을 설정했다.

우선 저소득층 부모의 어린이집 비용 보조 확대로 주거 보조금·난민법에 따른 보조금·연간 기본소득이 2만 유로(한화 약 2700만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비 및 부모 지출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등원비 면제 대상은 기존의 18만2000명에서 2019년 하반기 4만3000명 증가하며 이를 위해 2019년에는 270만 유로(한화 약 36억원), 2020년에는 650만 유로(한화 약 88억원)를 사용했다. 둘째, 어린이집 운영 시간 연장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는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 어린이 한 명 당 월 50유로(한화 약 6만5000원)를 추가 지원한다. 셋째, 보육인력 양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자는 기존에 주당 1시간이었던 보육교사 실습을 주당 3시간으로 늘리고 이를 위한 자금으로 2019년 130만 유로, 2020년 300만 유로를 사용한다. 넷째, 부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는 학부모 조연을 담당하는 상담사를 배치하며 이

를 위해 2019년 20만 유로, 2020년 30만 유로를 지출하기로 했다.

함부르크 시는 2019년 8월, 연방 정부와 좋은-어린이집-법률 협약을 마쳤다. 함부르크 시는 2022년까지 연방정부로부터 약 1억2100만 유로(한화 약 1630억원)를 지원받으며, 지원금은 어린이 보육 인력 강화 등에 사용된다. 주요 내용은 당시 보육교사 1인의 어린이 수가 2018년부터 5명으로 늘어난 것을 2021년까지 4명으로 다시 줄이는 것, 어린이집 정원 확대를 위해 추가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 등이다.

라인란트-팔츠 주는 더 높은 수준, 더 많은 재정 지원, 더 많은 무상교육을 목표로 2019년 9월에 연방 정부와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이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내 부엌 설치를 위해 1350만 유로(한화 약 175억원) 투자 △주 지역의 어린이집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통일되고 투명한 설치 기준 마련 △어린이집 교 육자 양성 및 근로 조건 개선 △어린이집 교원의 주당 근무시간 단축 △양성과정 직업훈련생과 대학생 입학 정원 각각 20% 증가 등이다.



전문성 가진 보육교사 확보

2019년 실시된 취학전 교육에 대한 OECD 연구에 따르면 OECD 가입국은 영유아 교육, 보육, 돌봄 분야에 수준 높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질의 보육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보육 인력에 높은 수준의 학위를 요구하는 OECD 가입국이 늘고 있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의 경우 취학전 교육 인력의 자격을 석사학위 소지자로 정하고 있다. 연구는 우수 인력을 취학전 교육 분야에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낮은 임금, 낮은 가치 인정과 사회적 인식, 열악한 근무조건, 경력 개발 가능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3세 미만 보육교사 중 97%가 전문적인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받아 독일 어린이집 인력은 다른 OECD 가입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양성 교육을 받으며, 직업 만족도 또한 93%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정에서 독일어를 구사하지 않는 어린이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연수 수

요가 높고, 약 4분의 1만이 임금 수준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직업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다고 답한 응답자는 36%에 그쳤다. OECD 연구는 자원이 한정적인 경우 적어도 특히 상급 직위를 가진 직원의 임금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활용해,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승진 등의 경력 향상의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보육분야의 전직 이유로 낮은 임금이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어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임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1년 독일경제연구소의 취학전 교육기관 교사의 업무 부담과 만족감에 대한 조사에서도 교사가 업무에 비해 보수를 낮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80%는 불충분한 임금에 부담을 느끼며, 75%는 시간적 압박감과 과중한 업무가 부담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또 80%는 관리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75%는 승진 기회가 적다고 응답했다. 연구는 해당 직업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문성을 가진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늘려 수준 높은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다. 니더작센 주는 앞서 살펴본 좋은-어린이집-법률의 시행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 및 보육 직종 종사자 양성을 위한 사립 직업학교 교육을 무상화하기 위해 200만 유로(한화 약 26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주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 양성과정을 제공하는 사립학교 재단에 사회복지 및 보육 분야 직업학교 1학년 재학생 약 2000명의 교육비를 지불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5000명의 보조사를 2021년 8월까지 단기 채용하고, 고용된 어린이집 보조사를 향후 보육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어린이 돌보미(Kinderpfleger)'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했다. 기존의 '보육교사(Erzieher)' 직업훈련이 3년 과정인데 비해 '어린이 돌보미' 직업훈련은 2년 과정이다. 직업훈련 과정 지원 자격은 10학년의 실업계 중등학교 졸업 이상이며 일반적인 듀얼 아우스빌드 과정

과 마찬가지로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한다.

모범적인 어린이집 시상 및 원장 회의 개최

'독일 어린이집 상(Deutsche Kita-Preis)'은 독일 연방 가족복지부가 매년 교육 재단과 언론사의 후원으로 모범적인 어린이집에 수여하는 표창이다. 하인츠 하이데 뒤르 재단, 기젤라 슈도라 재단, 카르크 재단 및 학부모 잡지와 교육 박람회 디다타 연합이 참여한다. 표창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과 어린이집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수여한다. 좋은 어린이집의 4가지 구성 요소는 △어린이 중심의 교육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어린이집 △구성원의 참여와 상호 존중 △혁신을 향한 배움의 공간이다.

선발과정은 5단계로, 첫째, 지원 서류 검토를 통해 25개 어린이집을 선발해 추가 서류 요청, 둘째, 추가 서류 검토를 통해 15개 어린이집 선발 및 전화 인터뷰 초대, 셋째, 10개의 최종 후보 어린이집 선발, 넷째, 두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10개 어린이집을 방문해 제출 서류 관련 내용 관찰 프로토콜 작성 및 인터뷰 실시, 다섯째, 심사단이 5개의 수상 어린이집과 1개의 대상 어린이집 선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 독일 교육·보육 교원단체, 바이에른 교원단체, 독일 볼터 클루버사 등은 공동으로 '독일 어린이집 원장 회의'를 개최한다. 2020년 8회째를 맞은 회의에는 매년 전국에서 어린이집 운영자, 학술 전문가, 사설 어린이집 재단 대표 등 3500명 이상이 참가한다. 강의와 세미나 주제는 어린이집의 다양성, 성공적인 어린이집과 보육의 질, 어린이집 보육 팀, 어린이집 운영자 리더십, 보육 관련 법규와 기관, 보육인력 확보, 어린이집 교육의 질, 어린이와 보육 인력의 건강,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등이다. 매년 전국의 각 도시에서 개최되며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8월 24~25일에는 뒤셀도르프, 9월 6~7일에는 함부르크, 9월 27~28일에는 라

이프치히, 10월 18~19일에는 아우스부르크에서 실시될 계획이다.

시사점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 평등과 가정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독일에서는 2018년 제정된 좋은-어린이집-법률을 통한 과감한 투자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 여건을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의 보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각 주 정부는 저소득층의 보육료 무상화, 어린이집의 보육 공간 개선,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확대, 보육교사 이외의 보조 인력 채용 지원, 보육기관 운영시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지역 고유의 좋은-어린이집-법률을 제정했다. 사실 독일은 연방주의 원칙하에 중앙 즉 연방의 지방 재정 지원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협력 금지(Kooperationsverbot)'라고 한다. 하지만 연방과 주 의회는 어린이집 정원 확대와 보육 수준 향상을 통한 교육 평등과 가정복지 실현이 협력 금지의 원칙에 우선하는 가치를 지닌다는 데에 동의했다.

보육 수요 증가, 보육 정원 부족, 전문성을 지닌 보육 인력 부족 등은 산업국가인 독일과 한국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다. 한국에서도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를 개별적인 사안으로 치부하지 않고 과감한 재원 투자를 통해 보육교사의 직업적 매력을 높이고 보육 내용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실천되어야 하겠다. 그 밖에도 기업의 교육 재단이 중심이 되어 우수한 어린이집을 발굴해 시상하고 보육기관 교사와 운영자를 위한 정보교환의 장을 제공하는 등 보육 수준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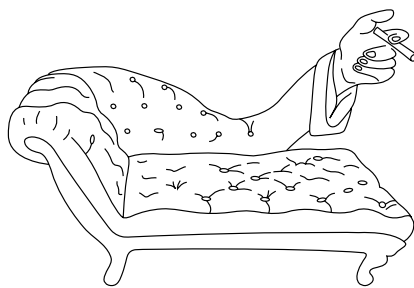
참고 자료

- OECD(2019), Provid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DIW(2021), Erzieherinnen empfinden vielfache Belastungen und wenig Anerkennung
- www.deutscher-kitaleitungskongress.de
- www.deutscher-kita-preis.de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노년

그 이유

“선 살쯤 지나며 대개 정신 활동의 탄력이 떨어져 정신분석 치료를 받기에 부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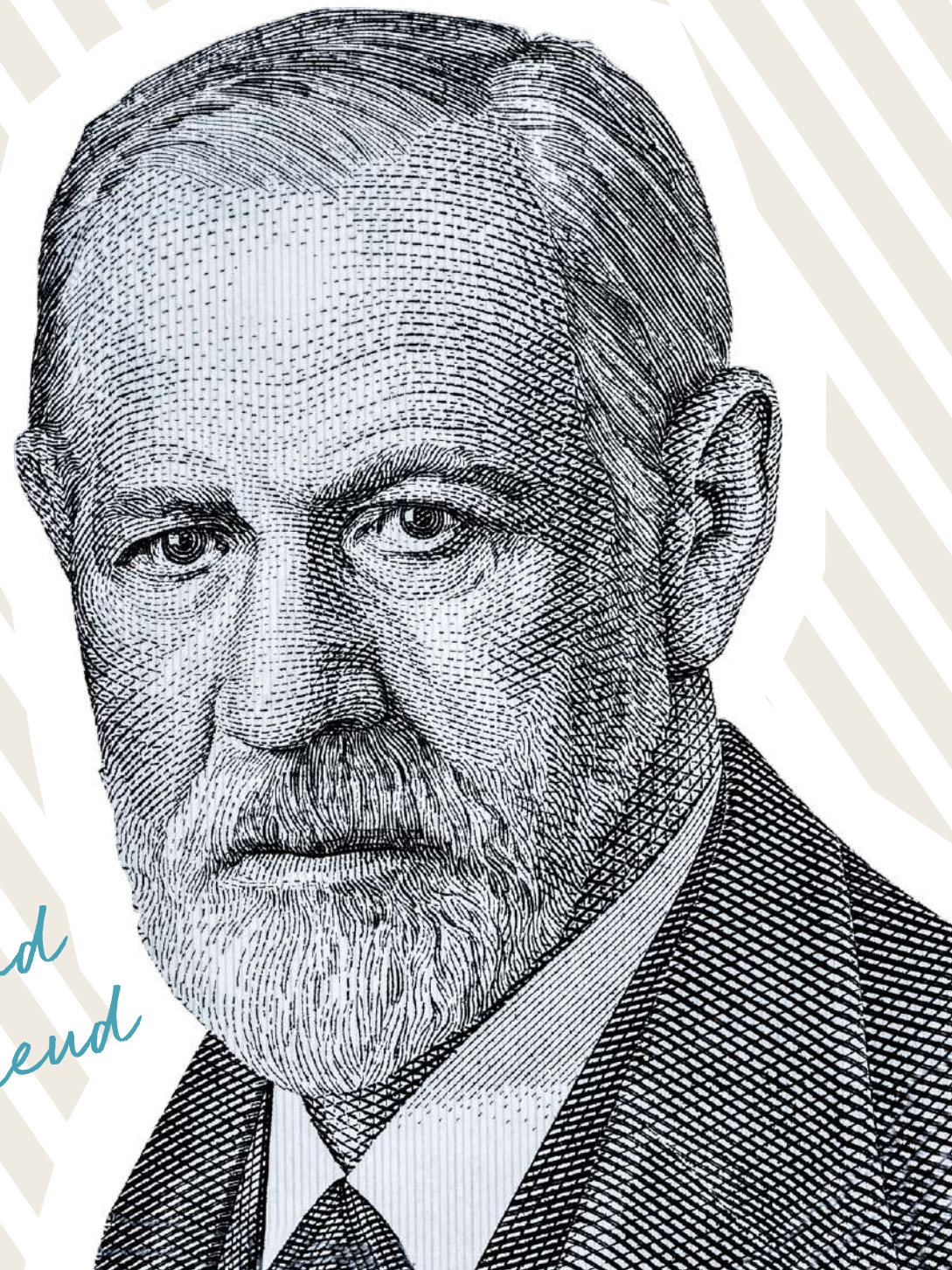
꿈 분석을 바탕으로 정신분석의 창시자가 된 마흔아홉살의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한 말이다. 당시 유럽의 평균 기대수명은 36세 정도로 50세쯤 지나면 노인이었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말은 ‘노인은 정신분석 치료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세계 최고의 정신분석가 프로이트가 그런 말을 했더니, 왜 그런 노인 차별적 기준을 품게 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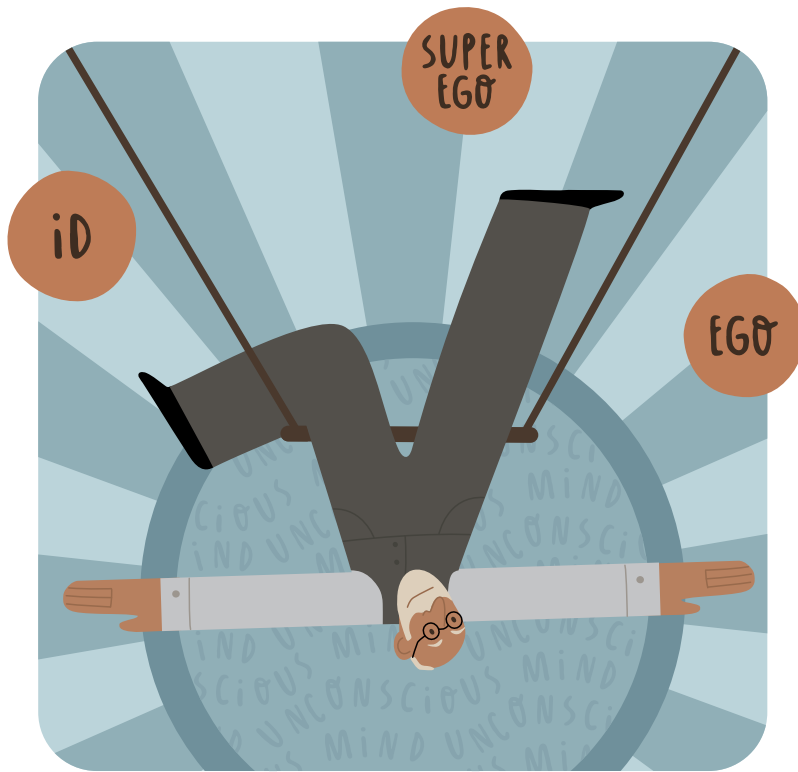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프로이트 자신의 늙음에 의한 불편과 죽음에 관한 생각이 그러한 몰이해를 갖도록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프로이트: 우리 시대의 삶(Freud: A Life for Our Time)』의 저자 피터 게이(Peter Gay)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자신이 선한 삶에 죽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죽지 않으면, 예순한 살 또는 예순두 살에 죽을 것으로 생각했다.’ 스스로 삶의 길이를 그렇게 예측한 어떠한 변명도 구실도 알려진 건 없다.

물론 많은 연구자가 늙음에 관한 프로이트의 잘못된 편견을 깨뜨렸다. 프로이트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며 연구 동료이기도 했던 칼 에이브러햄(Karl Abraham)이 앞장서서 노인 역시 정신 분석적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그 후 발달심리학의 대가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은 심리적 발달의 개념을 성인기에서 노년기까지 확장했다. 노년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심리·사회적 발달을 통한 적응 과정의 이정표를 이론화했다. 에릭슨은 예순다섯 살 이후를 한 인간으로서 충만한 감정으로 남을 배려하는 덕목을 지닐 수 있는 성숙기라 칭하였다. 샌디에이고 의과 대학 정신과 네미로프 교수는 정신분석 대상의 연령을 제한한 프로이트의 편견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우리 과학과 문명 모두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공헌을 한 위대한 천재다. 생애주기에서 어린 시절의 심리 발달이 성인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대단히 의미 있는 발견을 했다. 그러나 ‘노인 환자는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 이 주장만큼은 프로이트가 틀렸다.”

Sigmund Freud





● 역시 늙음은 수명의 길고 짧음, 학식의 깊고 얕음과 상관없이 각자의 생각과 삶에 따라 개개의 인생 여정 위에 자리하고 있다. 늙음을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늙어 가는 사람은 있어도 늙어본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노인은 본질적으로 정신분석치료의 혜택을 받기에는 정신 활동의 탄력성이 없다는 프로이트의 비판주의는 분명히 틀렸다.

이러한 여러 연구자들의 뒷받침보다 더 확실하게 프로이트의 오류를 가장 또렷이 증명하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바로 노인의 탄력성 상실을 내세웠던 프로이트 자신은 중년과 노년기에 풍성한 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점이다. 『꿈의 해석』을 썼을 때가 마흔네 살이었고, 『끝날 수 있고 끝날 수 있는 분석』을 출간한 나이는 여든한 살이었다. 여든한 살 노인이 쓴 책을 사람들은 ‘참으로 놀라운 독창적 아이디어의 폭발’이라 평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육십 대 후반에 암이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성 있게 엄청난 생산성을 유지했다.

프로이트는 제자 칼 에이버러햄보다 이십일 년 먼저 태어났고, 에이버러햄이 세상을 떠난 후 십사 년을 더 살았다. 마흔여덟 살에 생을 마감한 제자보다 삼십오 년 더 이승의 삶을 누렸다. 즉,

강산이 세 번 반 바뀌는 만큼 더 늙음을 겪었다. 그랬음에도 프로이트는 늙음의 탄력성을 곡해했고, 에이버러햄은 그 곡해를 똑바로 폈다.

역시 늙음은 수명의 길고 짧음, 학식의 깊고 얕음과 상관없이 각자의 생각과 삶에 따라 개개의 인생 여정 위에 자리하고 있다. 늙음을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늙어 가는 사람은 있어도 늙어본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늙음을 이야기할 순 있어도 늙음을 다 겪고 다시 살아나 이야기할 순 없다.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상가 중 한 명인 프로이트의 현실 속 늙음은 질병 속에서도 찬란한 사상과 저서로 탄력을 지녔지만, 생각 속의 늙음은 탄력이 없었다. 노인의 꿈, 그 무늬에 관해선 지혜가 반짝이지 않았다.

인문은 ‘사람의 무늬’다. 몸 안팎의 형편이 드러내는 글, 그림, 노래, 춤, 호흡, 목소리, 몸짓, 색깔, 눈빛, 양미간의 찌푸림, 주름

살 등이 모두 사람의 무늬, 인문이다. 꿈이라는 무늬로 사람의 무의식이 드러날 것이라고 여겨 그 인문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정신 분석학을 탄생시킨 프로이트 아닌가. 에릭슨은 아흔두 살까지 살며 마흔여덟 살에 주장했던 여덟 단계의 생애발달 주기 이론을 수정하여 한 단계를 보태었다. 다양한 외부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죽음을 삶의 순리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노년 초월의 아홉 번째 단계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노인이 되어서 노인의 인문을 살펴 마흔아홉 살에 했던 말을 왜 되짚어 보지 않았을까. 늙음의 무늬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오류를 성찰하지 못한 속내평을 짐작할 수도 없으니 궁금할 뿐이다.

프로이트는 1856년 오스트리아, 지금은 체코 땅인 모라비아의 프라이부르크에서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빈 의대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 빈 종합 병원에서 일했다. 당대 최고의 최면 의학자로서 정신요법의 초석을 다진 조세프 브로이어(Josef Breuer)와 함께 히스테리에 관한 연구를 했다. 그 후 프랑스 파리로 가서 현대 신경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경학자 장 마르탱 샤르코(Jean-Martin Charcot)의 연구원으로 삼 개월 동안 정신치료의 깊은 지식과 기술을 접했다. 빈으로 돌아온 프로이트는 신경 및 뇌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진료를 시작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성적이고 공격적인 충동으로 인해 갈등과 모순을 겪고 드러낸다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무의식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다. 마흔한 살부터 그는 자신의 무의식에 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삼 년 후 무의식적 성적 욕구와 충동의 관점에서 꿈을 분석한 『꿈의 해석』을 출간했다. 뒤이어 빈 대학의 신경병리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칼 융과 함께 국제 정신 분석 협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마음을 ‘이드(id)’, ‘에고(ego)’, ‘초자아(superego)’로 나누는 새로운 구조 모델을 제시한 『자아와 이드』를 출간했을 때 프로이



체코 프라하 한 마을에 매달린 지그문트 프로이트 동상(데이비드 세니 작품)

트는 예순일곱 살이었다. 하루에 스무 개비의 시가를 피운 골초였던 프로이트는 이때부터 입천장 암을 앓았다. 이미 서른 번의 수술을 받고도 재발하자 의사는 더 이상 수술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암은 악화되었다. 먹거나 말하기도 어려웠다. 통증은 더 해갔다. 1939년 9월 21일 프로이트는 의사에게 모르핀 투여를 간청했다. 고통은 사라졌고 곧 평화로운 잠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사라짐과 잠은 잠깐이었고, 모르핀 투여가 반복되면서 의식은 점차 혼수상태로 빠져갔다. 이를 후 아침, 프로이트는 삶의 마지막 십육 년 동안을 암으로 투병한 이승에서의 여든세 해를 마감했다. 사흘 후 시신은 화장되었고, 남은 재는 신경증 환자였고 후원자였던 나폴레옹의 조카 손녀 마리 보나파르트가 선물한 고대 그리스 항아리에 담겼다.

프로이트는 평생 노년과 병약함을 두려워했다. 전쟁통에 가족을 잃었고, 노후엔 암의 고통까지 더했다.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고,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곳곳이 두박두박 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활동 욕구는 쉰네 살에 스위스 루터교 목회자이자 정신분석가였던 오스카 피스터(Oskar Pfister)에게 보낸 편지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

“저는 일이 없는 삶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편치 않습니다. 저에게 일은 상상의

자유로운 놀이와 똑같습니다. 일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즐거움을 얻지 못합니다. (……)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저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육체적으로 나빠져 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를, 《맥베스》의 대사처럼, 일하다 죽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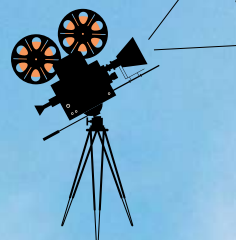
노인의 탄력성에 회의적이었던 주장과 달리 마지막 날까지 엄청난 용기와 비범한 창의성이 빛났던 한 편의 늙음 서사. 여기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늙음이 솔직한 아이러니로 마치 그리스 항아리 무늬처럼 새겨져 있다. ㉞

글 유흥준 CM병원 과장·한림의대 명예교수



썸이 시작되는 곳,

강릉



드 라 마
〈남자친구〉

D R A M A

제 작 사 : 본팩토리
편 성 : tvN
사진 출처 : tvN 남자친구 홈페이지



기분 좋은 긴장감이 느껴지는 '썸'. '썸'이란 걸 탈 때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저 달달하기만 할 두 사람의 '썸'은 어쩌서인지 세상이 질타를 한다.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여자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평범한 남자. 부와 명예를 버리는 게 어려운 일일까, 평범한 일상을 내놓는 게 어려운 일일까? 어쩌다 마주친 두 사람의 만남이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이야기로 펼쳐진다.

“책에서 읽은 건데요, 썸이라는 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는 확신이랑 의심 사이의 투쟁이래요. 확신과 의심이 밀물 썰물처럼 교차하는 거고 그러다 의심이 열어지고 확심만 남으면, 그때 사랑이 시작된대요.”
“투쟁...”

“대표님, 이 감정들이 좋아하는 감정인지, 확신과 의심이 투쟁하게 내버려 두면 어떨까요. 여기서 썸타는 사이로 다시 만난 거, 어때요?”
우연한 만남을 시작으로 서로에게 점차 물들어가는 로맨스 드라마 <남자친구>.
강릉에서 두 주인공의 썸을 따라가 본다.

글 정재림

“보고 싶어서 왔어요. 보고 싶어서... 그래서 왔어요.”

발길이 향하는 강릉으로 가다

동쪽으로 푸른 해변이 펼쳐지고, 내륙으로는 웅장한 산자락이 자리 잡은 강릉. 바다와 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지형적 특색 덕에 강릉은 여행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여행지다.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정동진과 경포대 등 20여 곳의 해변은 겨울이면 해돋이 인파로, 여름이면 피서객들로 붐빈다. 특히 동해와 인접해 있어 겨울에는 비교적 온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편이니 강릉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끄는 것도 당연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힘들어지자 국내 관광지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 강릉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어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또한 평창, 홍천, 양양, 횡성 등과 함께 휴양 목적의 한 달 살기 성지로도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잠깐 봐도 좋고, 오래 봐도 좋다는 방증이다.





여행 길잡이

교통

강릉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에 걸쳐 있어 대도시 연결망이 좋다. KTX 개통 이후 당일치기 여행도 가능할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졌다. 강릉역에서 나와 버스정류장에서 202-1번 버스를 타면 경포해변, 강문해변, 송정해변, 안목해변 카페거리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둘러볼 수 있다.

맛집

강릉에 왔다면 순두부를 꼭 먹어보자. 초당동 지역은 바닷물을 이용해 굳힌 초당순두부가 유명하다. 정은숙 초당순두부(0507-1424-3696)의 두부전골과 강릉팜 봉순두부(033-652-9885)의 팜봉순두부를 추천. 또한 강릉하면 빼놓을 수 없는 커피거리에 들러 산토리니(033-653-0931), 카페호사(0507-1408-3669) 등의 유명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향을 즐겨보자.

이처럼 많은 이들이 강릉으로 가는 까닭은 탁 트인 자연경관이 주는 색다른 감성 때문이 아닐까.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거닐며 바닷물 소리를 듣고 있다면 자연이 주는 힐링 ASMR이 따로 없다. 몸과 마음의 피로도 풀고, 감성 충전도 금방이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파도처럼 넘실대는 그리움을 따라

드라마 <남자친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여주인공 차수현(송혜교)과 가진 것은 없지만 자유롭고 맑은 영혼을 가진 김진혁(박보검)의 로맨스다. 1회분의 촬영은 먼 나라 쿠바에서 진행되었고, 이후 회차에서는 국내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배경으로 택해 눈길을 끈다. 그중에서도 강릉시의 심곡항은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장소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른바 ‘뽀’를 타던 두 주인공이 신분 차이에 의해 못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되자 차수현은 씬남 김진혁이 흑여 마음을 다칠까 봐 겁이 난다며 서로 시간을 갖자고 제안한다. “우리 무소식 하자, 서로 별일 없으니 무소식이다.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자”며 헤어진 두 사람은 한 달여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애뜻해진다. 결국 차수현은 “볼 수 있을 때 보고 사는 게 남은 인생”이라는 지인의 충고에 따라 김진혁을 찾아가는다. 바다가 파도치는 것처럼 당신을 그리워하는 게 당연했다고. 파도 소리 위로 진혁의 잔잔한 독백이 흐른다.

심곡항은 멀리 떨어진 오지이고 마을 양쪽을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깊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심곡이라 이름 붙여졌다. 마을 사람들은 6.25가 일어난 지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꼭꼭 숨겨진 작은 마을이다. 이 작고 조용한 마을까지 오는 동

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리움에 사무쳤을지. 절로 두 사람을 응원하게 되는 장소다. 이 밖에도 정동진에서 차로 5분도 채 안 걸리는 곳에 또 다른 촬영지인 등명해변이 있다. 일출로 유명한 정동진 등명해변에서 두 주인공이 어깨를 기대고 앉아있던 나무 벤치는 포토존 조형물로 설치돼 지금도 여행객들에게 드라마의 여운을 남겨준다.

“쿠바에서 빈털터리가 되어 만났고,
회사에서 상사와 사원으로 다시 만났고...
우리가 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될까요?”

끝은 또 다른 시작, 계속되는 우리의 이야기

드라마 <남자친구>의 두 주인공이 거닐던 주옥같은 배경들은 극중 두 사람의 마음을 대변한다. 일터에서 벗어나 상사와 사원의 관계가 아닌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으로 동등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릉인 셈. 두 사람이 모래 빼앗기를 했던 사천진해수욕장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주문진 해변의 카페 등 강릉 곳곳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를 느껴보자.

이왕 강릉까지 발걸음 했다면 빼놓을 수 없는 곳도 있다. 바로 커피 향이 가득한 안목해변 일대의 커피거리다. 보통 해변 주변에는 횡집이 많기 마련인데 안목해변 주변으로는 카페가 줄지어 있다. 2009년부터는 커피축제를 개최하며 커피 애호가들이 꼭 가봐야 할 커피도시로 재탄생했다.

마지막으로 강릉 여행을 좀 더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자전거 여행을 추천한다. 무겁게 자전거를 챙기지 않아도 강릉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전기자전거가 있다. 강릉역에서 ‘휠파인패스’ 앱을 이용해 자전거를 빌려 남대천을 따라 20~30분 달리면 안목해변에 닿을 수 있다. 안목해변에서 경포해수욕장까지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소나무 숲을 달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 강릉역-중앙시장-명주동-남대천-안목해변-경포해수욕장 코스는 총 14km로 1시간가량 소요된다. 함께 또 홀로 떠난 강릉에서 우리도 누군가의 인연이 되어 확신과 의심이 밀물 썰물처럼 교차하는 경험을 하게 될지 누가 알까. 강릉에서 잠들어 있던 연애 세포를 깨워보자. ㉠





www.bokjimes.com

news

‘아동학대 없는 세상’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

정부는 5월 31일 ‘아동 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36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아동권리 보장과 보호, 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정부부처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에는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대표가 참석,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선언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모든 국민에게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 아동 체벌 금지’ 메시지가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두고 각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에는 2차 목표로서 학대피해 의심 아동이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112)하거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상담(129)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행동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2~3년에 걸쳐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신중년 미래 일자리 방향 찾는다... 서울시, 온라인 세미나 개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신중년세대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고용환경 속에서 취업 방향을 잘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6월 16일 ‘신중년 취업트렌드 2021’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부 ‘일의 미래, 신중년의 미래’에서는 저서 ‘정해진 미래’,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 등으로 유명한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조 강연을 통해 ‘신중년의 미래를 정하는 앞으로의 10년’을 함께 짚어본다. 이를 통해, 신중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어떤 태도와 관점으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본다.

2부 ‘신중년 취업 히든카드’에서는 분야별 취업 전문가들이 변화하는 구직시장의 흐름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방법과 공공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며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신중년 맞춤형 취업전략을 소개한다.

또한 줌 화상 연결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신중년의 취업 고민과 질의 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생중계되며, 50+포털(www.50plus.or.kr)에서 사전 등록 신청을 받는다. 취업 준비 중인 신중년세대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 접속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 모색하다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개편 방향과 향후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홍선미 한신대 교수와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의 발제와 함께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는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원칙으로 대상의 보편성·접근성, 서비스의 포괄성·총분성, 서비스 전달의 통합성·적절성, 지역의 책임성·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요소로 지방분권, 공공책임성, 지역사회 기반, 보편적 이용자 권리 보장, 이용자 중심 통합적 접근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이용자, 서비스, 인력과 조직, 재정, 성과관리 및 거버넌스 등을 고려하여 세가지 전달체계 개편모형(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자체 통합돌봄기금, 조직개편,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주거정책, 읍면동 중심 전달체계 개편방안, 장애인 탈시설 현안과 통합돌봄 연계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6만여 가구 생계급여 혜택

올해 1월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17일 올해 1~4월까지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가구이며, 연말까지 약 15만7000가구가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000명, 의료급여 7만4000명, 주거급여 73만5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다.

2022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제34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작품 공모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6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제34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작품을 공모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 예술인을 발굴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34회째를 맞는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는 서양화, 일러스트, 동양화, 서예, 일반 사진, 휴대폰 사진 6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전국의 장애인과 그 가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제34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 안내’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art@kappd.or.kr)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으로는 전체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각 부문별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우수상(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 등 총 16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작(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 30명, 입선(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상)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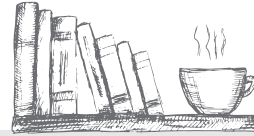
시상식은 10월 14일로 예정돼 있으나 코로나19 상황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BOOK

6월의 추천 도서



사회복지 추천 도서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김영순 지음 / 학고재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각 정부는 계속해서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확대해왔다. 그 결과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1990년 3.1%에서 2019년 12.2%로 약 4.7배나 증대했다. 물론 한국의 복지국가 수준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더디다. 또 여러 가지 질적 결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에 대응하는 빠른 복지 팽창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무복지 상태에서 작은 복지국가로의 진화를 해명한다. 민주화 이후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혹은 개혁 사례에 나타난 복지정치, 즉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선호, 그들이 보유한 권력 자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행위자들 간 역동적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온 힘은 무엇이며 그것이 복지국가의 성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힌다.

국가와 기업의 초고령사회 성공전략

이수영·신재욱·전용일·오영수 지음 / 박영사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함으로써 경제강국이 되기 위한 국가의 일자리 성공전략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성공전략을 제시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향후 늘어나는 고령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고용과 상생하는 고용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차원에서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는 세대 간 상생 기업문화 정립 및 직급을 간소화하는 등 인력 구조 재편, 직무급과 역할급 도입 등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건강경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기업은 불평등도 완화, 기본소득,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국가와 기업의 몫이다.



www.e-ssn.com

7월 SSN 직무능력향상교육

7월 직무능력향상 교육 과정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Zoom 화상강의 프로그램 활용)으로 진행됩니다. 교재는 실물교재 없이 pdf 파일로 메일 전송 예정입니다.

구분	과정명	일정	교육비	정원	교육시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7.8.(목)	50,000	150명	10:00-17:00 (6h)
홍보마케팅	사회복지사의 글쓰기	7.13.(화)	50,000	150명	10:00-17:00 (6h)
리더십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환경변화에 따른 리더십	7.15.(목)	40,000	100명	13:00-17:00 (4h)
사무행정	보고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수립 실무	7.20.(화)	50,000	150명	10:00-17:00 (6h)

7월 SSN 컨소시엄교육

7월 컨소시엄 교육 과정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25인 이하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과정명	일정	교육비	정원	교육시간
사회복지	지역사회 자원발굴과 네트워크	7.7.(수)~8.(목)	무료*	25명	09:00~18:00 (2일, 16시간) ※ 중식 및 교재 제공
회계실무	(중고급) 복지에산 효율관리	7.12.(월)~13.(화)		25명	
인사관리	사회복지시설 노무의 이해와 소통하는 인사	7.14.(수)~15.(목)		25명	
행정실무	실무자를 위한 프로젝트 작성과 프로그램 기획	7.19.(월)~20.(화)		25명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교육비 30,000원 납부

- 교육 신청: 복지넷(<https://www.bokji.net/>) 가입 후 'ssn교육'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
- 교육 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육연수실
T. 02-2077-3928 F. 02-2077-3948 E. essn@ssnkorea.or.kr



어린이의 희망을 키우는

새생명지원사업은...



“소아암·희귀난치질환 어린이와 함께 합니다.”
“당신의 후원금으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환아와 가족들에게 행복과 미소를 전합니다.”
“튼튼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보내주신 후원금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소중히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예 금 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수 협 408-01-003701

농 협 048-01-066568

국민은행 099-25-00110-607

우리은행 007-127792-13-201

하나은행 176-023563-00105

소득공제 및 새생명 소식안내를 위해 후원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문의 02)2077-3964, 3962 홈페이지 www.kids119.or.kr